

성폭력가해자 상담원을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

성폭력 가해자, 어떻게 만날까?

일시 2011년 10월 6일(목) ~ 11월 3일(목) 오후 2~6시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한국성폭력상담소 **주최**

재단법인 한국여성재단 **후원**

성폭력가해자 상담원을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
성폭력 가해자, 어떻게 만날까?

C O N T E N T S

10/6 (목)	1강	14:00~16:00	성폭력가해자와 나, 공동체의 관계를 다시 질문하다.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05
	2강	16:00~18:00	‘남성/여성’을 구분하는 이분법에 도전하라. 정희진 (서강대 여성학 강사)	19
10/13 (목)	3강	14:00~16:00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대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영화상영] 놈에게 복수하는 법 아오리 (다큐멘터리 감독)	27
	4강	16:00~18:00	성폭력가해자 상담의 실제와 상담기법 김미량 (상담심리전문가 / 서강대 강사)	33
10/20 (목)	5강	14:00~16:00	교육 현장에서 성폭력가해자 상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김지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43
	6강	16:00~18:00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분석 이경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53
10/27 (목)	7강	14:00~16:00	실제 사례로 보는 성폭력 가해자 행동분석 고려진 (경기대학교 범죄과학센터 선임연구원)	67
	8강	16:00~18:00	성폭력가해자교정·치료프로그램 및 외국 사례 소개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81
11/3 (목)	9강	14:00~16:00	한국성폭력상담소 가해자 상담사례 분석 양현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활동가)	115
	10강	16:00~18:00	성폭력가해자 상담 프로그램 진행 실습 이은심 (중앙대학교 성평등상담소)	119



성폭력가해자와 나,
공동체의 관계를 다시 질문하다.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가해자 거세와 전자발찌, 성폭력이 사라질까?¹⁾

“성폭력상담소지요? 00일보 000기자입니다. 곧 화학적 거세제도가 시작되는데, 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취재하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저희는 화학적 거세제도를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라서...”

“네? 찬성하지 않는다고요!?”

최근 성폭력상담소에는 이런 취재 요청이 심심치 않게 반복되고 있다. 오는 7월 24일은 최근 제정된 화학적 거세제도(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가 시행되는 날이다. 이에 앞서 기자들이 성범죄 근절에 대한 성폭력상담소의 입장을 듣고 싶어하는 것이다.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는 피해자들까지 가까워서 만나고 있는 성폭력상담소의 활동가가 왜 성폭력 가해자 처벌 정책을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는 것일까.

2000년대 중·후반은 온 나라의 사람들에게 끔찍한 아동성폭력 사건들의 충격이 지속되는 시기였다. 안양 초등학생 살해사건부터 조두순 사건까지. 이 아이들의 상처와 죽음은 지금 ‘전자발찌’, ‘신상공개’, ‘화학적 거세’와 같은 제도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이러한 가해자 처벌 강화정책이 아동성폭력을 근절하리라는 장밋빛 희망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최근에 벌어진 전자발찌 착용자의 성폭력 가해 사건 때문만은 아니다.

용산 초등생 살해부터 조두순까지, 끊이지 않는 아동성폭력

지난 2006년 용산에서 성폭력 의도로 접근한 이웃 어른에 의해 살해당한 아동의 사건을 모두 기억할 것이다. 같은 해 겨울, 안양 지역에서 실종된 두 어린이는 2007년 사체로 발견 되었고, 이후 검거된 범인은 성폭력 가해 후 살해했다고 자백한 바 있다. 2007년 봄, 제주도 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여 끊이지 않는 어린이 유괴, 성폭력 사건에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였다.

1) 한국성폭력상담소는 20주년을 맞아, 오마이뉴스와 공동으로 ‘성폭력에 맞선 20년’이라는 기획기사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기사는 [“아빠한테 강간당했는데... 한집서 살라” 성폭력에 맞선 20년 ⑧-아동성폭력 유형 무시한 ‘가해자 전자발찌’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7월 21일자 오마이뉴스에 실린 글입니다.

2009년도에는 8살 어린이 성폭력 사건(일명 조두순 사건)이 뒤늦게 세상에 알려져 국민들의 분노와 걱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미미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되었다. 2009년도의 충격과 분노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이듬해인 2010년에도 2월 부산에서 여중생이 납치·성폭력·살해되는 일이 발생하였고, 몇 달 후에는 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하여 성폭력한 사건이 벌어져 “어디 무서워서 애를 키우겠냐!”는 불안과 공포가 우리 삶을 깊이 흔들어 놓았다.

이런 잔학하고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정부와 정치권도 발 빠른 대응을 보였다. 성폭력 범죄자의 범정형을 높이고, 형법상 유기징역 상한을 25년에서 30년(가중시 50년)으로 늘렸다. 성인이면 누구나 인터넷에 접속해서 신상공개명령이 내려진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고,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우편으로 고지하도록 하였다.

전자발찌는 법률 제정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까지 소급적용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작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일명 화학적 거세라고 불리는 성충동약물치료제도 또한 2010년도에 통과되어 앞서 말한 대로 곧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적극적인 실행의지와 여론의 뒷받침에 비해 그 실행의 효과성에 몇 가지 의문들이 남아있다.

동의없는 화학적 거세, 실효성은? 글썽

2007년, 전자발찌 제도를 처음 시작할 때 정책 입안자들은 성폭력 범죄의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이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성폭력의 재범률을 살펴보니 약 15%로 강력범죄의 평균 재범률보다도 낮은 수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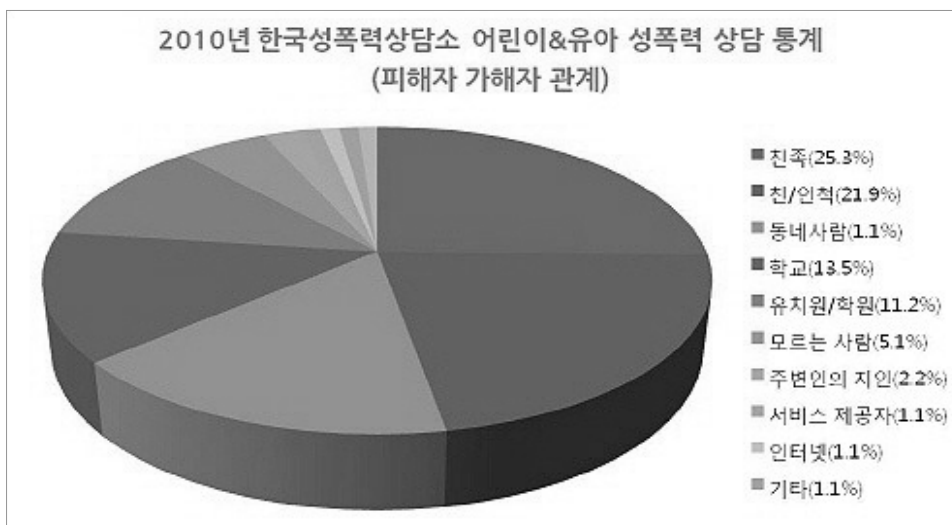
전자발찌 제도는 그 이후 2009년에는 미성년자 유괴범죄, 2010년에는 살인범죄로 대상을 확대하여 왔다. 최근에는 법무부가 강도죄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이제는 강도죄가 성폭력 범죄보다 재범률이 높다는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전자발찌의 착용기간도 최대 5년에서 10년, 30년(하한 10년)으로 계속 기간을 늘려왔다. 전자발찌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약 100억원 정도에 달한다고 한다.

화학적 거세의 경우, 약물치료의 특징상 본인의 동의가 있을 때 치료효과가 높아지는 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에서는 본인 동의와 관계없이 법원의 명령 선고로 실행되도록 하고 있다. 본래 이 법안을 제안했던 의원의 법안에는 가해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었으나, 국회 상임위에 법률안이 상정되기 하루 전 법무부가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내용을 변경하여 제안하였고 그대로 통과된 것이다.

현재 약물치료를 시행하는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가해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 한국의 화학적 거세 대상은 모든 성폭력 범죄자가 아니라 16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성도착증을 가진 환자로서 현재 법무부에서는 1년에 20명 정도가 대상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첫 해에 필요한 예산은 9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한다.

그러나 경찰에 신고되는 13세 미만 아동성폭력 사건이 1년에 약 1천건 정도라는 점에서 ‘화학적 거세’와 같은 강력범죄로 처벌되지 않는 더 많은 성폭력 사건들에 대한 처벌과 예방 방법에 의문점이 남는다. 이런 감시와 강경 처벌책들이 과연 어린이 성폭력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우선 어린이 성폭력의 실태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간, 은밀하게 이뤄지는 ‘어른권력’에 의한 성폭력



▲ 2010 아동&유아성폭력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 통계 지인에 의한 성폭력은 성인의 경우 80%대에 머무르지만 유아나 아동의 경우 90%넘는 비율을 보인다. 그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가족과 친척에 의한 성폭력이다. ©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10년도 상담통계(연간 총 1312건 중 아동·유아성폭력 사건 178건 분석)를 잠깐 인용해보자. 2010년도 성폭력 피해 상담 중 모르는 사람에 의한 피해상담은 전체 상담 중 약 12%를 차지했으며,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약 85%를 차지했다. 연령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13세 미만 어린이가 피해 중 절반 정도가 가족이나 친인척에 의한 피해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경우는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일어난 피해(교사나 친구에 의한 피해), 동네사람에 의한 피해다. 모르는 사람에 의한 피해는 5% 내외였다.

어린이 성폭력 피해가 일상적으로 늘 만나는 가까운 사람에 의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물론 한 상담소의 통계가 실태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난 20년간 이어져 온 7만여 건의 상담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해자의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친족은 아버지, 오빠, 할아버지, 고모부 등 피해 어린이와 가까이 지내면서 피해자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가정의 권력으로, 협박, 구타 등으로 어린이를 궁지에 몰아넣고 가해를 일삼으면서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은폐할 수 있어 그 어떤 피해보다도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다.

학교 교사나 아이들을 함께 돌보는 동네사람도 어린이들에게는 믿고 따라야 할 ‘어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다. 이렇게 가까이서 막대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에 의한 피해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은 채 오랜 기간 반복된다는 특징이 있다. 고소, 고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이유다.

이런 실태를 보면 가해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처벌수위를 높이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기가 어렵다. 집안에서 일상적으로 어린 아이를 추행하고 강간하는 가족에게 전자발찌를 채워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그 가해자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전자발찌가 피해 어린이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을 집에 있지 못하게 해야 할까, 아니면 집에 있게 해야 할까?

전자발찌, 성충동약물치료와 같은 방법은 어둡고 으스스한 곳에서 생면부지의 피해에 의해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는 데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어린이 성폭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범죄에는 잘 맞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처벌은 예방의 아주 일부…… 믿고 말할 수 있는 사회 되어야

세상에 알려진 일부 성폭력 사건 중에서도 언론의 조명을 받는 성폭력은 나름의 특징이 있다. 사건이 잔인하고 사회적 공분을 쉽게 일으키며 국민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한다. 이렇게 선별적으로 보도된 성폭력 사건이 마치 성폭력의 전형인양 대책을 마련하다 보니, 실태와 대책이 서로 어긋나는 안타까운 결과만 불러온 것이다.

따라서 가해자 처벌이 강화되었다는 요란스러운 언론 보도를 보면서 크게 안심이 되지 않는다. 사회에서 관심을 갖는 성폭력 사건들이 자신의 피해와는 너무 차이가 있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런 대책은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피해자들이 많을 까봐 걱정된다. 어린이 성폭력의 실태 및 잔혹성에 우리 사회가 한껏 공분하고 있을 때, 가정이나 학교에서 가까운 사람에게 입은 피해가 더욱 더 깊숙이 숨어들면 어쩌나 염려가 된다.

피해가 은폐돼 있다는 것은 피해를 입고도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자신의 가족이나 교사, 가까운 이웃을 처벌하지 못한 것은 전자발찌나 성충동 약물치료제도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어린이가 누구를 믿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 자신의 피해를 어디에도 말하지 못한 채 고통 받고 있는 어린이 피해자들에게 이런 가해자 처벌정책들은 어떤 해답을 주고 있을까?

시민들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시작한 제도들이 제대로 운영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전자발찌가 꼭 필요한 경우에 잘 활용되고, 필요한 대상을 선별하여 성충동 약물치료가 좋은 효과를 나타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런 대책들이 어린이 성폭력 예방을 위해 아주 일부의 역할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가정과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어린이 피해를 어떻게 찾아내고 반복되는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까? 사실 지역주민들이 모두 내 아이, 옆집 아이 가릴 것 없이 이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관심을 기울이고 살피지 않는 한 방법이 없다. 그런 피해를 감지했을 때 바로 믿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제도가 촘촘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 문제를 책임있게 해결하기 어렵다.

남편의 가해행위를 알면서도 묵인할 수밖에 없는 부인의 사연은 너무나 안타깝다. 물리적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서, 살림을 영위할 경제력이 없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 사회는 깊은 책임감을 통감해야만 한다. 더 급히, 더 광범위하게 도입되어야 할 대책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아버지에게 성폭력당하는 학생이 있는데…….”

오늘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학교 교사라고 밝힌 이는, “우리반 아이인데, 면담을 하면서 아버지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교사가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 신고의 의무가 있어서 알리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고 하던데 사실인가? 그런데 이 학생은 정말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전화를 건 선생님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사실 피해로부터 벗어나면 오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나서 이 학생이 큰 걱정없이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다고 약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생님의 고민과 갈등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새롭게 마련된 여러 가지 가해자 처벌제도가 이 학생에게 약속해주는 것이 별로 없는 것이다.

생색내기 정책, 선심성·일회성 대책으로는 뿌리깊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사회는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의 대책을 강구하고 독심있게 집행해야 한다. 그것이 설사 성난 여론을 당장 잠재우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당장 유권자의 한 표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진정성이 있는 대책이라면 믿고 기다리며 함께 노력할 것이다.

함께 읽어볼 자료

성폭력 가해자 등록, 공개 시스템 - 반성폭력운동과 만나는 풍경²⁾

정유석 (한국성폭력상담소 前 활동가)

“우리 딸이 마을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록 하지 않았을 거예요.” 성폭력 가해자가 마을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딸에게 주의를 주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강간, 살해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매건(Megan)의 가족은, 모든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 성폭력 가해자가 마을에 있을 경우 이에 대해 통지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였고, 1994년 10월, 매건이 살해된 후 89일 만에 뉴저지주는 유죄판결 받은 성폭력 가해자의 정보를 정부 당국에 등록하고, 지역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가해자의 소재와 행방을 추적하고 등록된 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이 가능하게 하는 법을 통과 시키게 된다. 이 법은 연방 차원의 성폭력 가해자 등록, 공개법 제정을 추동해 내었고, 이후 90년대 말까지 미국 내 모든 주에서 관련법이 통과되게 된다. 미국의 성폭력 가해자 등록, 공개법은 이후 캐나다, 영국, 남아프리카, 호주, 일본, 노르웨이 등지에서 비슷한 입법을 하는데 영향을 주게 되고 우리나라 역시 이 법을 모체로 하여, 2000년 청소년 성보호법에 일부 조항을 추가하는 형태로 관련법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외에 가해자의 정보가 일괄적으로 공개되는 시스템을 택한 유일한 국가로 간주되었는데, 2007년 개정을 거치면서는 열람권자와 공개방법이 보다 제한되는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반성폭력법 개혁/입법운동(미국의 경우 1970년대 강간법 개혁운동, 한국의 경우 1990년대 성폭력 특별법 입법운동)이후 성폭력 가해자 등록, 공개 시스템은 성폭력 이슈를 다루는 중요한 도구로 인식되면서 미디어와 여론의 관심, 정치인들과 관련단체, 일반 대중의 지지를 받아왔다. 한편, 지역사회 공지 시스템은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뿐 아니라 시민 일반을 잠재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2) 본 글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식지 <나눔터> 62호(2008 겨울호)에 실린 글입니다.

임파워링 하는 방안으로 간주되었다. 또한 제범에 대한 위협, 수사를 보조할 효과적 법적 도구의 필요성, 가족과 아이들을 보호할 효과적 매커니즘의 필요성(Pearson 1999) 등의 이유들과 성폭력 가해자의 프라이버시를 능가하는 잠재적 피해자들의 권리의 중요성(Fodor 2001)을 바탕으로 그 필요성이 주장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화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등록, 공개 시스템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논쟁을 가져왔다. 이 시스템이 실제로는 범죄예방과 피해자보호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그리고 따돌림, 직접적 폭력 등 가해자에 대한 시민들의 자구적 폭력 가능성에 대한 우려 이외에, 이 제도를 둘러싼 대부분의 논쟁들은 일반적으로 (잠재적)피해자들의 보호와 가해자의 인권/헌법적 권리의 보호 사이에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지에 집중되어 왔으며, 이러한 논쟁은 대부분 법적, 인권적 용어들로 구성되어 왔다. 이에 더해, 위협 관리 정책을 강조하는 규제적 신자유주의 거버넌스(편집자주: governance, 공공관리)의 출현에 대한 우려가 소위 좌파 진보주의 진영에 의해 제기되어 왔다. 한편, 여성주의적 관점은 시민 자유주의적 시각이 간과해온 지점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이 시스템이 사회적으로 구성된 성과 젠더화된 권력관계로서 성폭력 이슈를 조명하고자 했던 여성운동진영의 노력과 대치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성폭력 가해자 정보 등록, 공개 시스템에 대한 법적 논의는 가해자의 기본적 시민적 자유와 인권에 대한 논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국제 인권 논의의 차원에서는 이 법이 시민·정치적 협약과 유럽협약 등 국제 협약에 보장되어있는 가해자의 프라이버시, 가족, 가정에 대한 권리, 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이동의 자유, 자유와 안보에 대한 권리, 노동과 적절한 생활수준 보장에 대한 권리 등을 위반하고 있음이 검토되어 왔다. 그러나, 이 권리들 역시 절대적인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가해자 권리에 대한 이러한 주장들은 가해자의 권리와 피해자 혹은 잠재적 피해자의 권리와 균형을 맞출 것을 요구받게 된다. 지역적, 국내적 차원에서의 법적 논의는 헌법의 창을 통해 조명될 수 있는데, 가해자 정보 공개법에 대한 헌법적 도전은 주로, 가해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과도한 제한과 침해에 관한 실체적 적법성, 가해자가 적합한 청문, 항소 절차 등의 기회를 제공받았는지 등에 대한 절차적 적법성, 그리고 이중처벌, 불소급원칙 등에 대한 이슈가 주로 다루어진다.

법적인 비판이 시민(잠재적 피해자)과 가해자 권리의 이익을 비교하고 균형을 맞추는데 주력한다면, 좌파 진보진영의 접근은 이 법을 만들고 유지하는 법적, 사회적 레토릭(편집자주: rhetoric, 수사법, 어법)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둔다. 성폭력 가해자 관련법에 대한 진보

진영의 비판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우선 도덕적 패닉에 대한 우려를 들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 그룹, 문화 등이 사회적 가치와 이익에 위협이 된다고 여겨질 때, 한 사회와 그 구성원들이 이에 과장되게 반응하는 것으로 정의되는데(Cohen 1972), 매카시즘과 911 이후의 무슬림 사회에 대한 공포도 이와 같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입장에서, 성폭력 가해자 관련법 역시 성폭력 이슈에서 함께 고려해야할 사회경제적 요소를 배제하고, 재범율이 높은(혹은 높다고 알려진) 성도착자, 소아기호 가해자와 같은 부분적 요소에만 집중하면서 이들에 의한 위협을 일반화하고 모든 아이들을 피해 가능군으로 설정하는 광범위한 도덕적 패닉을 형성한다고 비판한다. 또한 형사정책과 사회통제의 관계도 주요하게 지적되는데, 이는 현대 사회가 가해자의 범죄기록 통제를 통해 어떻게 정상으로부터 비정상을 구분하고 배제하는지에 대한 분석이다. 이 견해는 성폭력 가해자 관련법을 통해 학교, 청소년 기관(혹은 일반 시민) 등으로 하여금 잠재적 가해를 감시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규율적, 규제적 경향이 비정부 행위자들에게로 확대되는 것에 주목한다. 이러한 점과 관련, 성폭력 가해자 등록, 공개 시스템은 정부에게 정보제공자의 역할만을 맡길 뿐 일반 시민들에게 정치적 권한은 적게 주면서도 범죄, 위협 감소의 의무를 부과한다고 비판받기도 한다. 공동체 정보공지 시스템은 공공의 공포와 무력감을 감소시키고, 잠재적 피해자화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고려되기도 하지만, 이는 시민 모두들 잠재적 가해자로 전제하는 것과 다름 아니라는 것과 범죄 통제와 감시의 부담을 피해자들과 비정부 행위자들에게 부과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해자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을 통치함을 역설한다.

한편 여성주의적 접근을 통해서도 정부권력 확대를 위해 섹슈얼리티와 법적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진보진영의 평가를 공유하면서도, 이 법이 어떻게 반성폭력법 개혁, 입법운동이 개념화하고자 했던 성폭력의 정치적 맥락을 제거하는지에 주목해볼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진보진영의 평가가 단순히 형사(범죄) 정책 발전을 통한 사회통제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거버넌스와 성폭력범죄 통제의 관계를 다른 일반 범죄 통제를 통한 국가 통치에 단순히 대입시킴으로써 성폭력에서의 젠더 역동을 무시했음을 지적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한편, 성폭력 가해자 등록, 공개법이 입법, 운용 과정에서 채택한 원리들은 여성운동이 반성폭력법 개혁, 입법운동을 통해 관철시키고자 했던 가치와는 대립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데, 뉴저지주의 가해자 위험도 평가척도를 살펴본 Corrigan(2004)의 분석을 중심

으로 몇 가지 시사점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여성운동이 피해자들 사이의 구분과 차별적 대우에 비판적이었던 것과 달리, 가해자 등록, 공개 시스템은 특정 피해자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형태로 입법된 것의 문제이다. 이는 특정 피해자들의 취약성을 강조하는 것은 합리적인 듯하나, 어떤 피해자들을 더 보호해야한다고 말함으로써 다른 피해자들은 아닌 것으로 만드는 역학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가해자 등록법이 청소년 관련법에 편제되어있고, 청소년 대상의 특정 범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 청소년위원회의 성폭력 가해자 위험군 평가척도와 뉴저지주의 가해자 위험성 척도에서, 피해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가해자의 위험도가 낮아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이때 피해자 나이 척도는 단지 나이에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피해자의 성적 행동과 성력에 중점을 두는 성폭력 일반에 대한 전형적 법적 태도와 연동되며, 또한 이러한 태도는 무력한 피해자 이미지-어린이 피해자의 그것-와는 조화되지 않는 성인 피해자에게 최협의설을 적용, 최대한의 저항의 책임을 묻게 되는 것과도 긴밀히 연동한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성인 대상의 가해자 역시 등록하도록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나, 두 나라 모두, 피해자의 나이, 범죄유형(물리적 힘의 정도, 접촉 정도 등)에 따라 위험성을 다르게 평가하면서 ‘취약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흥기나 극단적 폭력을 수반한 강간’으로 전형적 성폭력 이미지를 강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전의 가해전력 등에 따라 고위험군으로 분류하는데 이는 이는 관계에서의 고소, 유죄율이 낮은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이는 관계의 성폭력에 대한 편견을 나타내는 부분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성폭력 가해자 등록, 공개 시스템은 좋은 피해자와 나쁜 피해자를 구분하고 일반 강간, 단순 강간으로부터 진짜 강간을 구분하며, 피해자들 사이의 다른 차이를 문제화하고자 했던 여성주의의 노력을 되돌려 놓는다.

반성폭력운동이 주요하게 문제제기했던 성폭력의 원인에 대한 인식은 성폭력 가해자 등록, 공개법을 통해 다시 흔들리게 된다. 이는 성폭력을 정상화하는 사회문화적 구조를 문제시하고자한 여성운동진영의 노력과는 달리, 가해자 등록 시스템이 성폭력을 개인의 정신적 결함과 병리학적 이유의 결과로 보고 있음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이러한 경향에 대한 우려는 뉴저지주 매건법의 경우 명확히 드러나는데, 입법목적과 매뉴얼을 통해 소위 ‘myth on crazed rapist’를 채택하고 있으며, 가해자의 위험도 평가 과정이 “정신 건강과 법률 전문가에 의해 합리적으로” 유추되도록 하고 있어, 성폭력을 설명하기 위해 사회구조적 접근보다는

개별사건에서의 역동을 중시하는 심리학적 견해 및 언어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척도는 위협성에 대한 여성의 경험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비판된다.(Wells Motley 2001) 우리나라에서의 성폭력 이슈의 비정치화, 병리화의 경향은 신상공개법 제,개정 과정 이전에 성폭력특별법 제정단계와 이후 반성폭력운동에 대한 정부의 백러쉬 (편집자주 : backlash, 반동) 과정 등에서 이미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일례로, 정부가 2005년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기존 성폭력상담소들의 역할을 초기상담과 연계로 제한하고, 성폭력 이슈에 접근하는 시각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지게 될 조사, 연구, 교육 등의 역할을 의료적, 심리적 지원 모델에 근간한 정부주도의 성폭력방지센터로 이관하고자 했던 시도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신상공개법의 경우도 운영의 세세한 방식과 운영주체의 가치관 등이 자세히 검토될 일이다.

특정 피해자에 대한 차별적 보호와 성폭력에 대한 병리적 접근 이외에도, 성폭력 가해자 등록, 공개 시스템은 가족제도를 더욱 보호하고자 하고, 공적, 사적 영역의 구분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중 기준을 강화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나이 어린 여자형제, 생물학적 자식, 양자 혹은 배우자의 자식 등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가장 낮은 위험군(위험도 0점)에 속하게 되고, 반면 낯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가해자의 경우 가장 높은 위험도를 가지 것으로 구분되는 뉴저지 평가척도는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근친 성폭력사건의 가해자정보 공개여부는 피해자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성폭력상담소들에 의해서도 피해자 권리의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으로 주장되어 왔는데, 위험군이 낮은 것으로 구분되는 것과 피해자에게 미칠 우려를 고려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로, 공개대상 정보의 제한 등을 통해 피해자 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친밀한 관계의 성폭력을 위험도 높은 것으로 인식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가해자 등록, 공개법은 근친성폭력, 이는 관계의 성폭력을 덜 위험한 것으로 특정짓고 심지어는 괜찮은 성폭력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비판될 수 있으며, 이 시스템이 공적, 사적 영역의 경계를 잇고 소위 사적,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드러내고자 했던 여성주의의 노력과는 반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비판될 수 있다.

등록대상과 기간, 공개범위 등 세세한 부분에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미국의 가해자 등록, 공개시스템은 특정 성폭력 가해자로부터의 공동체 전반과 잠재적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덜 위험한 가해자와 더 위험한 가해자를 구분하는 방식, 법이 착안되고

작동되는 전제 등에서 닮아있다. 그동안 이 법에 대해, 미국의 강간위기센터들은 별다른 입장표명을 하지 않아왔고, 다만,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실제 성폭력 사건에서 플리 바기닝(편집자주: plea bargaining, 유죄협상제도)을 통해 유죄를 인정하는 가해자의 비율이 낮아지고 끝까지 재판을 통해 무죄판결을 구함으로써 피해자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어려움을 얘기한 정도이다. 우리나라의 성폭력 상담소 등 여성운동진영에서는 기존의 법제도와 이 법을 둘러싼 가해자 인권논의 등에 피해여성의 경험이 반영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성폭력 가해자 신상공개법 재개정 시 적극적 지지의견을 피력한바 있으나, 현재의 논리와 자구적 방어권 논의에 머무르는 정도로, 이 법이 채택한 전제들과 이로 인한 문화적, 사회적 영향이 결과적으로 여성주의 진영이 목적인 것과 어떻게 달라져 있거나 왜곡되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반성폭력 개혁, 입법운동이후 성폭력 이슈 자체에 대한 담론은 과연 발전이 있었는지, 새롭게 출현하는 성폭력 관련, 성폭력 가해자관련 법안들에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이와 같은 흐름을 분석하고 대응할 여성주의적 언어를 갖추지 못해온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질문해볼 일이다.

가해자 관련 법안에 대한 법적, 진보주의적 논의들이 풍성한 반면, 이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은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가해자 관련법이 여성주의 반성폭력 개혁, 입법운동의 수사학을 기초로 구성되었다고 얘기되거나 혹은 반성폭력운동의 연장선에 있는 성과로 인식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 시스템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은 법적, 진보주의적 접근이 갖는 이분법적 한계 -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권리의 충돌 혹은 강압적 정부권력과 가해자, 시민의 충돌로서 이슈를 파악하는 - 를 넘어 이러한 견해가 간과한 젠더 역동성을 드러내고, 이 법이 성폭력을 둘러싼 담론을 어떻게 재형성하는가를 근본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후 제도화와 비관력 약화, 성폭력 이슈에 대한 대응담론 정제 등의 어려움을 딛고, 반성폭력운동진영과 학계 모두, 다시 힘을 모아볼 수 있기를 바라본다.



‘남성/여성’을 구분하는 이분법에 도전하라.

여성과 남성의 구분, 그 이분법이 의미하는 것
- 양성평등 담론의 남성 중심성 -

정희진 (여성학/ 평화학 강사)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라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담론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여성 아니면 남성으로 태어난다고 보는 데서 출발한다. 고등 동물인 인간은 남녀 양성으로 구성되고 뚜렷이 구분되는, 자웅이체(雌雄異體)라는 가정을 마치 과학적 사실처럼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여성이나 남성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여성은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난다. 성별 코드(fe/male, male)는 성차별 사회에서만 의미 있는 차이이다. 다시 말해 차이가 차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차이를 만든다. 자본주의의 발달과 노예 노동의 필요에서 인종이라는 범주가 탄생한 것과 마찬가지로, 차이의 등장 자체가 정치적인 것이다. 가부장제(sexism) 사회에서만 인간의 성(sex)은 차이로서 의미를 갖는다. 흔히 섹스에 대한 ‘오남용’을 젠더라고 생각하지만, 섹스는 이미 젠더의 산물이다.

따라서 남성-남성성, 여성-여성성의 관계는 임의적이며, 일관되게 주어진 공식이 없다. 젠더는 모든 곳에 공기처럼 편재(遍在)하는 가장 오래된 제도이지만, 동시에 특정한 사회적 조건에서만 작동하는 편재(偏在)적인 정치적 산물이다. 이런 의미에서 남성성은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존재하지 않음이 아니라 남성이 남성성과 연결되는 것은 당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남성이 남성성을 체현하게 되는 과정은 하나로 공식화될 수 없다. 남성과 남성성의 관계는 자연스러운 연결이 아니라 특정한 시대와 장소에서 남성과 남성이 맺는 관계, 남성과 여성이 맺는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무엇이 남성적인 것으로 간주되는지, 그래서 남성적인 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성별과 계급에게 권력과 지위를 가져다주는지는 한정된 시공간에서의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그러한 남성성과 여성성의 구성은 그 사회의 물질 기반, 언어, 문화 등에 따라 다르다.

젠더를 섹스에 대한 ‘사회화’ 개념으로 설명할 때- 그 사회화를 문제적인 것으로 인식하든 자연적인 것으로 생각하든 간에- 남성성은 획일적, 절대적, 고정적으로 이해되기 쉽다. 남성을 동일한 젠더 계급(“main enemy”)으로 보는 관점은 모든 남성이 남성 특권으로부터 같은 이익을 보지도 않고, 모든 여성이 똑같은 고통을 겪지도 않는 복잡한 현실을 은폐한다. 동질적 실체로서 ‘여성’과 대치하고 있는 동질적 실체로서의 ‘남성’은 없다. 여성주의가 정체성의 정치를 넘어 ‘여성’이라는 범주가 종속적으로 구성되는 복합적 형식들에 대한 투쟁이라는 관점에 동의한다면, 젠더는 성차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성차와 다른 사회적 분석 범주와의 관계로 이해되어야 한다. 젠더를 다른 사회적 모순과 동떨어져 작동하는 남녀 권력관계

로만 인식한다면, 남성과 남성의 차이를 다룰 수 없거나 남성과 남성의 차이는 젠더 문제가 아니게 되고, 그들은 계속 성을 초월한 보편적 인간으로 간주된다.

인간과 사회 현상을 성 인지적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작업은 이중의 과제를 갖는다. 새로운 지식과 인식론은 기존 개념을 약화시킴으로서만 만들어진다. 보이지 않던 젠더 구조를 드러냄(gendering)과 동시에 그러한 젠더 구조가 (일시적이고 우연한) 역사적 산물임을 강조함으로써 젠더를 해체하는 데 일조하는 것이다. 즉 분석 범주로서 성차는 원인이나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남성성의 위계와 그 구성은 언제나 진행 중이며, 유동적이고 다양한 사회적 힘들이 교차하고 충돌하는 모순적 과정이다.

성별 이분법과 단일한 남성성 개념은 젠더를 선재(先在)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그리하여 현실에서 새로운 개념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기존의 지배적인 의미의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개념을 현실에 적용시킴으로서 문제 해결의 출구를 찾기 어렵게 만들고(tautology), 성별 체제를 탈역사화 한다. 젠더는 어느 곳에서나 내연(內燃)하지만 젠더의 작동은 조건적이다. 실천은 그 조건을 밝히는 것이지 젠더의 보편성, 강력함,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성별 범주는 대개 대칭적, 상호 보완적, 양가적, 적대적으로 인식된다. 그래서 상호 보완성을 주장하는 사람은 페미니스트나 민주주의자, 합리주의자로 간주되고, 성차별주의자는 남녀 관계를 적대적, 대칭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가리킨다(물론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남성 우월이 규범이기 때문에 평등을 강조하는 페미니스트를 남녀 간의 조화를 깨는 불화 조장 세력이라고 비난한다). 즉 성차별 여부를, 남녀 간의 공통성을 강조하느냐 아니면 배타성을 강조하느냐의 문제로 보는 것이다. 문제는 이 두 가지 사고방식 모두 인간의 양성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물론 전술한대로 인간은 양성으로 태어나지도 않으며 양성으로 구분할 수도 없다.

성차/성 역할로서 젠더, 그 성차가 문제적으로 작동할 때 대안으로 제시되는 양성평등론은 다음의 두 가지 정치적 이해관계를 함의하고 있다. 하나는 사회에 대한 순응이고, 하나는 양성성(“남녀 조화”) 개념의 남성 중심성을 은폐하는 것이다. 첫째, ‘(성) 역할’ 개념은 기능주의가 강조하는 바, 사회 전체를 원활하게 작동시키기 위한 개인의 역할에 강조점이 있

다. '남성성/여성성/양성성', '성차', '성 역할 사회화' 등 젠더와 관련하여 흔히 통용되는 용어들은 모두 개인의 정상성과 관련이 있는데, 이는 젠더를 개인화, 사소화, 탈정치화하는데 결정적이다. 역할 개념은 개인이 사회와 맺는 관계에서 사회 구조의 변화보다 적절한 사회화 과정을 통한 적응, 기여 등 개인의 책임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성 역할로서 혹은 성차로서 젠더 개념에서 문제화되는 것은 사회나 젠더 자체가 아니라, (성차별적인) 사회를 순기능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의 역할이다(우리가 흔히 접하는 젠더 담론들, “현대 사회와 여성의 역할”, “남북 교류에서 여성의 역할”, “지역 사회 발전과 여성의 역할”과 같은 언설들이 대표적이다). ‘역할’이 기능주의적 표현이라면, ‘분업’은 이보다 좀 더 갈등주의적 함의가 있는 것이 다르다면 다를 뿐이다. 젠더는 사회가 기능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개인의 역할을 ‘지정’하는 모델이 되는 상징체계이자 그 자체로 핵심적인 분업 시스템이다. ‘성별 분업’이나 ‘성 역할’은 차별과 착취의 완곡어법이다.

기능주의적 시각이 갖는 부정의(injustice), 몰역사성, 탈정치성은 차치하더라도, ‘성 역할’이라는 말은 있지만 ‘계급 역할’, ‘인종 역할’이라는 말은 없다는 점에서 ‘역할’이 얼마나 정치적인 담론인지 알 수 있다. 최소한 공식적인 사회적 담론에서 “사람은 자신의 계급적, 인종적, 장애, 연령 등의 위치에 따라 평생 그에 맞는 역할(직업)을 해야 한다. 흑인은 청소부 역할만을 해야 하고, 시각 장애인은 안마사라는 직업만을 가져야 하며, 가난한 사람은 그 위치에 맞는 심리, 행동, 감수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은 발화될 수 없다. 이에 비해 성별에 따른 역할론은 자연스럽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사회는 성 역할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는 집단에 대해서 심리적, 문화적, 정치경제적 차원에서 혐오와 적의, 처벌을 행사한다. (최소한 공식적으로는) 계급, 장애, 연령, 인종, 종교, 지역, 국적 등으로 인한 분업(차별)은 부정 의하며 극복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 반면, 젠더는 그렇지 않다. 계급이나 인종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사회적 제도이고 피해지만, 젠더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둘째, 성 역할로서 젠더 개념은 남성적 가치와 여성적 가치 사이의 비대칭성을 은폐한다. 이분법은 둘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다. 이분법은 하나의 확대이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모든 인간은 인간이기 이전에 남성이거나 여성이어야 한다. 동시에 남성은 인간이지만, 여성은 여성이어서 여성(성)과 남성(성)의 관계는 다름이 아니라 모순이다. 여성은 남성의 기준에서 인간과 같아야 하면서도 동시에 남성의 기준에서 인간과 달라야 한다. 남성성의 내용과

가치는 남성이 정하지만, 여성성의 내용과 가치는 남성의 대상화와 반작용(re/action)으로 구성된다. 즉 젠더 이분법에서 여성적인 것은 남성적인 것을 설명, 매개, 돋보이기 위해 존재하는 남성적인 것의 잔여적 범주인데도, ‘양성평등’이나 ‘여성 인권’ 담론은 마치 여성성과 남성성이 대칭(대립, 대체, 대안……)적인 범주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든다. 다시 말해 젠더 이분법은 여성을 위한 공간은 없다는 현실, 개념 자체의 남성 중심성을 은폐한다. 젠더는 남성과 여성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일부 남성만을 규범적 인간으로 전제한 남성과 비(非)남성의 관계이다. 주체인 남성은 인류를 대표(representative)하고 재현(representation), 창조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남성의 여성에 대한 숭배, 찬양, 욕망은 차별, 혐오, 경멸과 모순되는 현상이 아니다.

성별 이분법은 주체/타자, 강한/약한, 질서/무질서, 전쟁/평화와 같이 거의 모든 언어 유형과 연결되어 작동한다. 물론 이러한 대립항들은 현실도 사실도 아니다. 남성이 자신을 정의하기 위해, 남성의 입장에서 자신 외의 것들을 배타적으로 구성한 ‘이데올로기’이다. 예를 들어 몸과 감각, 에로스(愛慾)에 대한 전통 철학의 적대감은 이성(理性)의 개념을 형성할 수 있는 근거였다. 첫 번째 언어인 남성적인 것은 두 번째 언어인 여성적인 것의 기원이자 우월하고 특권적인 의미로 통용된다. 젠더를 조직하는 기준은 남성성임에도 마치 남성과 여성 집단 내부가 각각 통일된 독자적인 대립항인 것처럼 인식케 하여 성차별을 합리적 사회 질서로 만든다. 젠더 이데올로기와 젠더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젠더는 대칭적이라고 ‘선전’되지만, 실제로는 차별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여성의 입장에서는 억압이나 모욕의 현장에서 이 모순을 인식, 언어화하기 어렵다.

어떤 시대나 지배적 남성성의 핵심 요소는 앞 시대의 남성성들과 겹치거나 재구성, 재결합, 인용의 결과들이다. 다시 말해 남성성은 연속선의 개념이지, 정의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남성 권력은 현실을 진단하고 정의 내리며 경계를 만드는 힘(boundary setting)을 의미하는 것이지, 누군가가 남성성을 ‘가진 것’이 아니다. 각각의 남성성들은 상호 배반적이거나 불일치하고 양립하지 못하는 것들이 모순적인 짝을 이룬다. 문제는 남성성의 변화와 대체가 남성 권력의 쇠퇴나 변질이 아니라는 것이다. 어느 시대에도 출몰하는 “남성의 위기” 담론은 다양한 남성성 중 하나가 다른 남성성으로 교체될 때의 남성 권력 반응인데, 젠더 이분법에서는 이를 ‘여성 지위 향상’으로 이해하게 만든다.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헤게모니적 남성다움은 ‘백인 이성에 중산층 비장에 성인 남성’의 경험이다. 기존 영미 중심 여성학 이론에서 남성성 개념의 구성 맥락은 ‘정상적인 국민국가’(제국주의) 성립 전후에 진행된 것으로, 산업 자본주의 시대의 근대적 사회 조직 원리였던 백인 중산층 가족의 성별 분업에 기반을 둔 생계부양자-보호자 남성 모델을 일반화한 것이었다. 생계부양자-보호자 남성 모델은 계급, 국적, 인종 등 남성들 간의 차이, 즉 가난하거나 전쟁에 패했거나 외국군이 주둔하는 등 다양한 식민 상황으로 인하여 여성을 부양하거나 ‘지키지 못하여’ 자기 그룹의 여성들이 지배 계급 남녀를 위해 섹슈얼리티와 노동을 제공함으로써 생존하는(할 수밖에 없는) 남성의 남성성을 설명할 수 없었다.

여성학을 포함하여 기존 지식 체계에서 여성들 간의 차이는 젠더 문제로 다뤄져 왔지만, 남성들 간의 차이는 남성은 성별 범주라기보다는 성별을 초월한 사회적 범주라는 성차별 의식에서 계급이나 인종과 같은 권력의 문제 그 자체이지, 남성들 간의 차이가 젠더와 관계되어 있다는 인식은 부재했다. 즉 남성과 남성의 차이는 남성이 생산하고 결정하지만, 여성과 여성의 차이는 여성이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남성과 남성의 차이를 성별 문제로 인식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이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사회적 경계를(social divisions) 주도적으로 구획하는, 즉 차이를 생산하는 권력은 남성에게 있다는 남성 사회에 대한 여성주의 비판과 모순되는 것이다.

남성은 여성과 마찬가지로 성별화된 존재지만, 젠더를 초월한 보편적 인간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로 인해, 현실에서 그리고 이데올로기적으로 개별 남성들은 별다른 노력 없이도 성별 하나만으로 ‘가족’, ‘국가’, ‘인류’를 대표하였고 때로는 모든 여성에 대한 특권을 갖게 되었다. 남성은 개인으로, 정치적 인간으로 간주되는 반면, 여성은 언제나 집단적 타자로, ‘어머니’, ‘창녀’ 등 성 역할로 환원되어 역사와 무관한 존재로 인식되어왔다. 이에 대한 ‘일차적 저항’은 젠더를 정치 의제화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회 현상에서 젠더를 가시화하는 작업은, 다른 사회적 모순과의 관계성을 설명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젠더를 재생산하게 된다. 남성과 여성의 관계로만 젠더를 사고한다면(monolithic gender), 즉 인종과 계급과 같은 남성과 남성의 차이-여성과 여성의 차이를 성별 분석에 교직하여 고려하지 않는다면, 특정한 역사적 맥락에서 성별 범주의 유동성(multiple gender difference)을 드러낼 수 없고, 이 때 젠더의 가시화는 오히려 이분법적

사고를 강화하게 된다. 젠더를 다른 사회적 모순과 상관없이 분리되어 작동하는 ‘여성 문제’로만 인식한다면, 남성과 남성의 차이를 다룰 수 없거나 남성과 남성의 차이는 젠더 문제가 아니게 되고 결과적으로 성차를 본질화한다.

젠더가 구성되는 과정임을 보여줄 때 젠더 질서의 변화도 가능하다. 남성성의 임의적 구성은 남성성의 편재(遍在)와 편재(偏在)를 동시에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남성들의 경험에서 젠더와 남성성의 차이를 동시에 분석하는 것은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작업이다. 남성성을 해체하기 위해 남성성을 명시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남성 연대 속에서 남성들간의 다름(the unlikeliness of unified masculinity)을 드러내 것은, 결국 인종, 민족, 계급, 지역, 종교, 몸 상태, 세계관, 섹슈얼리티, 사회적 배치 등의 사회적 모순들이 특정한 역사적 맥락에서 젠더와 맺는 연관성이 생산하는 남성성을 분석하는 실천이 될 것이다.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대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영화상영] 놈에게 복수하는 법

아오리 (다큐멘터리 감독)

〈영화상영〉

제목 : 늬에게 복수하는 법

장르 | 시간 : 다큐멘터리 35분

제작년도 : 2010년 3월

〈시놉시스〉

일상에서 성희롱, 성추행 등 비일비재하게 성폭력의 피해를 받던 한 여성이 늘 피해를 입고 도 도망 다니는 자신을 바꾸고 싶어 가해를 했던 늬들에게 복수할 방법을 궁리한다.

대학동기, 공무원, 삼촌 등을 차례차례로 만나면서 그 동안 왜 자신이 성폭력에 대항하지 못했는지를 깨달아 간다.

〈연출 의도〉

여성, 혹은 성폭력피해 경험자들이 왜 자신의 피해에 대해 무기력하게 받아드려야 하는지, 얼마나 발악을 해야 간신히 살아남을 수 있는 건지,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상영된 영화제〉

2010 제10회 인디다큐페스티벌 - 신진작가 지원프로젝트 수상작

2010 제11회 제주여성영화제 본선진출

2010 부산여성인권영화제 초청작

2010 제6회 인천여성인권영화제 초청작

2010 제10회 서울국제뉴미디어 페스티벌 본선 진출

2010 제4회 여성인권영화제 본선진출

〈제작지원 내용〉

2009 인디다큐페스티벌 & 미디어아트 신진작가 지원작 당선

2009 영화진흥위원회 하반기 독립영화지원작

2009 충무로 영상센터 오재미동 장비지원작

〈기사 내용〉

문화저널21 - 남자들이 보면 뜨끔할 영화 ‘놈에게 복수하는 법’

‘인디다큐페스티벌2010’에서 상영된 독립다큐멘터리 영화 ‘놈에게 복수하는 법’은 당찬 제목만큼이나 당찬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성희롱, 성추행 등의 피해를 입은 한 여자가 늘 피해를 입고도 도망 다니는 자신을 바꾸고 싶어서 가해를 했던 ‘놈’들에게 복수할 방법을 찾아 나선다는 내용이다.

대학동기, 공무원, 삼촌 등 ‘놈’들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다. 심지어 그들은 선량한 가장이며 번듯한 직장의 일원이기까지 하다. 여자는 그들을 만나면서 그동안 왜 자신이 성폭력에 대항하지 못했는지를 깨달아간다. 그녀는 카메라로 스스로의 내적 갈등과 행적을 일기를 쓰듯 기록한다. 성폭행 피해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대부분 무거운 분위기라면 이 영화는 경쾌하고 발랄하게 전개되는 것이 특징이다. 때문에 영화가 상영되는 도중, 객석에서 몇 번의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첫 번째 ‘놈’은 건강검사를 하며 성추행을 했던 보건소 직원이며 두 번째 놈은 성희롱을 했던 대학동기다. 세 번째 놈은 가장 강적이다. 바로 그녀의 어린시절을 아프게 했던 삼촌이다.

그녀는 놈들을 만나러 가면서 스스로에게 묻는다. “왜 내가 그들을 만나 복수해야 하지? 지금의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리고 왜 그들을 만나는 것을 이토록 두려워해야하지?”

‘놈들’을 왜 만나야 하는지에 회의를 품은 그녀는 영화를 계속 찍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녀는 피하거나 숨지 않고 다시 카메라를 든다. 자신뿐 아니라 이 땅의 수많은 ‘그녀’들을 위해…….

그 과정에서 그녀는 성폭행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놈에게 복수하기 위한 법’을 머리 맞대고 논의한다. 일명 ‘복수모임’이다. 피해를 당했음에도 죄인처럼 가해자를 피해 다녀야 했던 그녀들은 자신만의 복수법을 계획하고 그것을 차근차근 실천에 옮기기로 한다.

그녀는 바다 앞에 섰다. ‘놈을 만나야 한다!’ 화푸른 바다와 붉은 노을을 바라보며 그녀는 두려워하고 있는 스스로에게 ‘놈’을 만나야 한다’고 설득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옛 기억에 대한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스스로 ‘이젠 아무렇지도 않아’라고 생각했던 것이 정말 아무렇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된다.

영화는 자신만의 진정한 복수는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놈’을 삶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잊는 것이 자신의 복수법이라면 그 방법을 고민해야 하고, ‘놈’을 죽여야 해결할 수 있다면 죽이는 방법을 고민해보고, ‘놈’의 잘못된 행실을 세상에 알리는 방법이라면 어떻게 알릴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

어쩌면 그녀에게 ‘놈’을 만나고, 안 만나고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였는지도 모른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눅 들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의 상처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당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녀는 ‘놈’을 만나기 위한 긴 여정의 끝에서 잊고 있었던 자기 자신과 오롯이 만난다. 놈들을 만나기 위한 여행은 곧 자기 자신을 만나기 위한 여행이기도 한 것이다.

상처투성이에 외로운 모습일지라도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긍정하며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로 걸어갈 것을 다짐한다. 그네를 타며 환히 웃는 그녀의 모습이 유난히 예뻐 보이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하지만 영화는 쉽게 희망을 말하지 않는다. 마지막 장면에서 “놈을 만나러 가겠습니다”라고 외치는 그녀의 모습은 관객에게 상상의 여지를 남겨줌과 동시에 영화가 끝난 후에도 이 땅의 수많은 그녀들의 싸움은 앞으로 계속될 것임을 암시한다.

영화를 보면서 각자 마음 속에 있는 ‘놈’을 떠올리며 자신만의 복수방법을 연구해보는 것은 어떨까.

- 문화저널21 배문희 기자 baemoony@mhj21.com -

〈20자평〉

- 고을** 불편한 진실과 마주한 사람들의 적나라한 모습!
- 이용** 재미와 감동? 으로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힘을 가진 영화 강추!!!
- 나랑** 감독은 성폭력 피해자로서 집요하게 자기 내면을 파고든다. 그 과정이 너무 유쾌 발랄하다는 게 이 영화의 빛나는 지점
- 민초** 성폭력 피해는 시간이 흐른다고 해도 괜찮아지지 않는다는 불편한 진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하고 아파히는 생존이야기.
- 달가루** 성폭력 피해자에게 너는 곧 괜찮아 질거라는 의례적인 영화가 아니라 너는 괜찮 나?고 물어봐 주는 영화. 당신은 괜찮은 건가요?
- 어진** 놈에게 복수를 기대하는 성폭력피해자라면 이 영화를 보고 실망할지도 모르겠다. 다만, 진짜 복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이 영화를 강추한다!
- 달빛** ‘나에게만 일어났던 일인줄 알았던’, ‘나는 성폭력 피해자가 아닐 것이라 믿었던’, ‘하지만 나 역시도 “피해자”라는 것을 깨달았던 영화’
- 음** 짜질하고, 대책없고, 엉뚱한 주인공의 복수여행이, 내 마음을 마구 울린다!
- 밤의아이** 바로 내가 주인공이 되어 자신의 상처를 대면하러 가는 듯한 느낌! 너무나 리얼 해서 좋았고 울었고 감동받았다. 영화를 보는 것 자체도 치료. 강추!
- Paranbiz** 나도 알게 모르게 가해자가 된적은 없을까! 남성들이 꼭 봐야 하는 영화.



성폭력가해자 상담의 실제와 상담기법

김미랑 (상담심리전문가 / 서강대 강사)

성폭력 가해자 상담의 실제와 상담기법

» 김 미 랑

서강대학교 강사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이사
상담심리전문가, 현실치료전문가

성폭력 가해자 상담을 하기 전에..

상담자로서, 나 자신에게 묻는다.

1. 우리가 꿈꾸는 현실은 과연 현실적인 것인가?
2. 이 변화를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
3. 그러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준비되어야 할 것은?

성폭력 가해자는 어떤 사람인가?

- ▶ 사이코패스, 흉악범, 파렴치범...
환자, 정상인?...

외면하고 싶다.
이 세상에서 도려내고 싶다.

- ▶ 그러나,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면??
무엇을,
- ▶ 어떻게 할 것인가?

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의 목표

<성폭력 피해자 치유 ·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매뉴얼> (변혜정/현혜순, 2005)

- ▶ 가해자의 왜곡된 성인식과 인지체계의 변화를 위하여 성폭력 발생의 선행원인을 탐색하고 가해자의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수정한다.
- ▶ 가해자의 성폭력 행위에 대한 정당화, 합리화, 최소화 경향 등 가해자 시각을 피해자 관점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가해자의 인지왜곡을 수정한다.
- ▶ 가해자의 성폭력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 성폭력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심각한 영향 등을 교육한다.
- ▶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처를 공감하고 자신의 성폭력 행위를 인정함으로써 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게 한다.

프로그램의 구성 및 치료과정

- ▶ 초기단계: 성폭력 행위에 대한 합리화, 정당화, 최소화 등의 방어기제와 왜곡된 성인식 탐색
 - ▶ 중기단계(인식변화): 성폭력 행위를 직면하는 과정-성폭력 사실의 부인과 인정, 성폭력 범죄의 책임 인정, 성폭력 행위 과정의 이해, 성폭력 피해자의 상처 인식
 - ▶ 후기단계(행동변화): 피해자 상처 공감훈련, 위험상황 대처 기술 훈련, 자존감 향상훈련
- # 가해자의 어린 시절 상처 다루기 등을 할 것인가?
가해자가 성폭력에 대한 책임회피를 방조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가해자는 대부분 비자발적인 내담자

- 1) 문제의식 결여, 상담동기 부족
 - ▶ 상담, 치료를 강요 받는다고 느낌
- 2) 상담자에 대한 오해-무조건적 저항
 - ▶ 비자발적 내담자의 상태, 감정에 대해 공감하기
 - ▶ 상담자는 특별히 관계 형성에 노력해야 한다.
튜닝-공명하는 바이올린
 - ▶ 가장 중요한 것은 상담자-내담자 관계 형성
 - ▶ 상담자의 역전이 우려가 있다.

진정한 고객으로 만들기

- ▶ 문제 인식은 하지만 해결 의지가 없고, 타인이나 환경에 대한 불평을 상담자에게 얘기하며, 오히려 자신을 희생자로 생각하고 문제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내담자를 ..
- ▶ 단순한 방문객이나 불평불만자가 아닌 진정한 고객이 되게 하여,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게 하려면..
- ▶ 상담자와 내담자가 일치된 해결 목표와 기대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비자발적인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의 자세

- ▶ 상담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신념을 버린다.
- ▶ 비자발적인 내담자도 사실은 변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기억한다.
- ▶ 융통성을 기른다.
- ▶ 내담자가 당신을 거부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 ▶ 내담자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에 관심을 보인다.
- ▶ 무엇이든 내담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지각될만한 일을 한다.
- ▶ 상담자의 계획을 알린다.

▶ 인간에 대한 관점_현실치료적 관점

인간의 모든 행동은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한 선택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타인의 욕구 충족을 방해하지 않는다.

▶ 문제에 대한 관점

원인론: 감정, 사고, 행동, 신체생리적 측면

상담초기에 해야할 일; 준비작업

▶ 상담관계 수립하기

상담관계=동맹관계= 협력적인 관계 형성
경청, 공감적 이해, 진실성 필요

▶ 상담에 대한 동기를 증진시키기

▶ 저항에 대해 작업하기

▶ 상담 구조화 및 상담 목표 수립하기

라포형성이 가장 중요하다. 시작이 반!!

- ▶ 가해자와 상담관계 맺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가해자를 보는 관점의 정리
존재_Being 와 행위_Doing의 문제
Warm vs. Strict
- ▶ 친밀감 형성과 신뢰감 형성
- ▶ 내담자 문제에 대한 파악과 이해
- ▶ 상담 목표 설정

중기과정: 성폭력행위에 대한 내담자의 태도 다루기

- ▶ 내담자의 인지왜곡 다루기
- ▶ 피해자 상처를 인식하기
- ▶ 성폭력 행위에 대한 재인식
- ▶ 피해자 상처공감훈련
_사과편지쓰기, 피해자 상처를 느껴보기
- ▶ 질문
_이러한 과정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_상담의 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전략은?

후기과정

- ▶ 내담자(가해자) 자신의 성의식 점검하기
- ▶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행동으로 실천하기
- ▶ 질문
 - _내담자의 이 변화는 진실한 것인가?
 - _상담의 효과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 _종결의 의미는?

기타: 나머지 과제

- ▶ 가해자 가족, 주변인, 동료가 가지는 양가감정 다루기
- ▶ 초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 피해자 중심이란?
- ▶ 공동체 내에서의 사건: 가해자의 동료이기도 하지만, 피해자의 동료이기도 하다..
- ▶ 피해자 중심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
- ▶ 가해자와 마찬가지로 교육이 필요하다.

사례

- ▶ *민* 사례
- ▶ 강원도 **사례
- ▶ *** 교회 사례
- ▶ **대학교 사례
- ▶ 청소년 집단가해자 실패 사례 등



교육 현장에서 성폭력가해자 상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김지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정책사업팀장 / 前 중앙대 성평등상담소 전임상담원)

1. 대학 내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

사건의 세부적인 처리과정은 각 대학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건의 신고 후 피해자가 공식적인 처리를 원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비공식적인 상담과 처리를 하는 절차와 공식적인 처리를 하는 절차로 구분된다.

중앙대의 경우, 적극적으로 사건의 처리를 하는 학교 중의 하나로 사건이 신고 된 이후 상담만을 원하는 경우가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사건의 처리를 위한 절차를 밟는다.¹⁾ 물론 이때 피해자가 원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즉 대책위원회까지 가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상담소에서 중재 등의 처리를 해주기 원하는지 등이 기본적으로 전제된다. 또한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도 처리방법이 달라지게 되므로 초기 사건의 접수 과정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피해자와 논의한다. 공식적으로 대책위원회로 가기를 원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상담소에서 중재를 시도하고, 이러한 중재가 실패할 경우 대책위원회를 소집한다.

이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상담으로만 종결

- 피해자가 사건의 처리를 위해 어떠한 것도 원하지 않고, 자신의 심리적 문제에 대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2) 상담 - 개인적 혹은 비공식적 처리

- 피해자가 사건을 처리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경우.
- 대책위원회로 올라가기 이전에도 시도, 피해자가 가해자를 공식적으로 징계하기 원하는 경우는 불가함.
- 이때 피해자의 진술서 확보 및 요구사항 확인, 가해자와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 피해자

1) 이는 각 학교의 특성이나 담당책임자의 가치관이나 영향력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도 한다.

의 요구사항 이행을 위한 중재(가해 사실 인정, 개인적인 사과, 사과문 공지나 전체 구성원에 대한 사과, 재발방지교육 이수, 휴학 등) 등이 이루어짐.

- 사건의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학내에서 처리하기를 원하는 경우. 이때 추가 신고를 요청하거나 경고문을 붙이는 방식 등으로 처리함으로써 추가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CCTV 등을 통해 추적이 가능하나 상담소 권한 밖의 일이 된다는 이유로 이를 통해 가해자를 잡는 것은 실제로 어려움이 있음.²⁾

3) 상담 - 개인적 혹은 비공식적 처리 결렬 - 대책위 구성

- 피해자가 처음부터 대책위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중재과정을 거치기도 함. 가해자의 입장에서든 처음부터 대책위의 소환을 받는 것보다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문제가 되는 지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도 나쁘지 않음. 직접 대책위에서 소환을 하고,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 가해자 측의 반발이 더 커지기도 함.
- 또한 이때 가해자 측에서는 피해자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는 경우도 있음. 예를 들어, 피해자가 퇴학처분을 원할 경우 자퇴의사를 밝힌다든지 하는 식으로. 물론 이때 피해자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가능. 자퇴는 수용할 수 없고 징계로서 퇴학처분을 원하는 것인지, 학교를 떠나도록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인지 등 피해자가 원하는 사안의 본질이 무엇인지와 합의가 되어야 함.
- 그러나 가해자에 대한 공식적인 징계 등을 원할 경우는 대책위원회의 소집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음.
- 혹은 가해자가 외부인인 경우에도 처음부터 대책위를 소집.
- 대책위원회에서는 사건의 처리방향에 대해 논의, 필요시 조사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사건을 조사, 조사결과를 대책위에 회부하고, 대책위에서 최종 성폭력 여부를 결정. 징계가 필요하다고 간주될 경우 징계위원회에 징계 요청.
- 자칫 피해자를 설득하여 사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2) 이는 대학에 따라 차이가 있음.

2. 사건처리과정에서 경험하는 문제점들

- 가해자 관련 부분을 중심으로 -

1) 피해자의 성향에 따른 차이

- 피해자가 어떠한 성향을 가졌는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에 따라 사건처리에 대한 요구의 정도, 방향 등이 다름. 즉 어떤 피해자를 만났는가에 따라 사건 처리의 방향이 아예 달라지는 경우가 있음.
- 예를 들어, 사건이 1회적인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데, 페미니스트인 피해자를 만났을 경우 VS 강간에 준하는 행위이고 질병도 얻었으나, 전형적인 약자인 여성의 특성을 지니는 경우
- 사건에 비해 강한 처벌을 요구받는 가해자들도 부당함을 호소, 그러나 자칫 사건이 공론화 되는 등 확대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피해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음.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과나 수용은 절대 될 수 없음.
- 이때, 중재를 위해 피해자를 설득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종종 담당자가 피해자 중심적이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목소리들과 만나야 하는 긴장을 유발
- 반대로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사건의 가해자에게 어떠한 처벌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음.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리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피해자를 설득. 물론 피해자를 개인적으로 접촉하지 못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막는 것은 불가. 특히 이러한 경우는 취약한 피해자인 경우가 많아 가해자의 의도가 더 잘 먹혀들어감.
- 또한 이는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사건처리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따르는 것과도 연관되는 문제에서 발생함.
- 현재 성폭력이 친고죄로 되어 있고, 친고죄가 폐지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도 각 대학의 학칙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것은 친고죄의 유지와 무엇이 다른가? 학칙개정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공론화된 논의 없이 현재 각 대학에서 이를 개별적으로 바꾸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짐.

2) 합리적 기준의 부재

- 위와 같은 문제 때문이라도 합리적인 기준의 마련이 필요함.
- 학내 성폭력 사건들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처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적절한 중재의 선, 징계의 선은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은 없음. 현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 원칙 아래 성폭력 사건은 모두 비밀을 유지하여 처리. 이는 일면 타당하지만, 한편 사건의 처리기준에 대한 합의점을 만들어 내는 것을 어렵게 함.
- 물론 피해자가 느끼는 피해의 정도가 모두 다르고 이에 의해서 피해자의 요구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피해자와 가해자 개인의 특성에 따라 정도가 크게 좌우되는 것이 합리적인 가하는 의문.
- 또한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은 지나치게 강한 처벌이 아닐까에 대한 우려와 다시 공동체에 복귀가 어려운 것으로까지 가는 경우 성폭력은 다른 사건에 비해 그렇게 강하게 처벌되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도 하고, 담당자로서 엄청난 부담을 지게 하기도 함.

3) 학교의 입장

- 사건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에 따라 사건처리에 대한 입장이 달라짐.
- 교내 사건일 경우, 혹은 가해자가 교내이고 피해자가 교외인일 경우는 사건을 심각하게 다루고자 하지 않으며, 사건에 대한 입장차이가 드러남. 대책위의 구성자체에 대해 거부 반응을 보이기도 하며, 상담소에서 사건을 알아서 중재하여 처리해 줄 것을 기대함. 중재를 한다는 것은 공식적인 처리결과를 가져오지 않음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사건이 축소화 되는 것으로 진행되기 쉬움.
- 반대로 가해자가 교외인일 경우에는 보다 일사불란한 처리과정과 일치된 입장을 가짐.
- 사건이 외부로 드러나는 것을 꺼려하여 사건에 대한 경고문 올리는 것 등을 꺼려하기도 함.

4) 사건조사 담당자로서의 입장과 가해자 교육자로서의 입장의 모순

- 학교에서는 담당자가 처리해 주기 원함. 비용의 문제와 비밀의 문제, 그리고 시간의 문제가 얹혀있음.
- 사건의 맥락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각 개인에게 적절하게 맞추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피하는 입장에서 볼 때, 가해자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 등을 학교의 담당자가 맡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가장 적절함.
- 그러나 부분의 대학에서 상담원이 위원이나 간사 등으로 조사위, 대책위 등에 참여 하는 형태이므로 학교의 담당자는 신고 된 사건의 처리를 맡는 과정에서 가해자에 대한 조사자로 위치하게 됨. 이 과정에서 이미 가해자와는 거리감이 형성되기 때문에 담당자는 가해자의 교육이나 상담 등을 진행하는데 어려움.
- 이러한 이유로 사건의 담당자가 가해자의 상담과 교육을 동시에 진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에서 둘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음.

5) 가해자의 교육, 상담

- 가해자에 대한 직접 교육이나 상담 등을 맡기 보다는 외부에 의뢰를 하여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
- 그런데 이들을 적절하게 의뢰하는 것의 어려움. 각 기관이나 단체들에서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충분히 다양한 성폭력 가해자들의 스펙트럼을 포괄하는 것인지, 어느 부분이 해당 가해자에게 적합한 것인지, 교육 기간의 문제 등의 어려움.
- 또한 교육이나 상담 뿐 아니라 사회봉사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들을 보낼 적절한 곳을 찾기 어려움.
- 그나마 이러한 대상이 되는 것은 대부분 학생이 가해자인 경우이며, 교수나 강사 등이 가해자일 경우 이러한 부분은 거의 역할 밖의 문제로 되어 있음.
- 가해자 교육에 대한 비용의 문제. 일반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는 어느 정도 합의가 있으나, 가해자의 경우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많은데 때로는 이것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어려운 경우가 있음. 공동체 내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인지의 선택 문제.

6 기타

① 사건처리자와 되는 담당자

- 피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없고,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한 초점.
- 피해자는 더 이상 사건으로 만나고 싶어하지 않음. 가해자와 공감대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비슷한 맥락. 피해자를 지원하기는 하지만 사건조사자로서의 위치. 피해자는 자신을 지원하는 또 다른 사람, 지지자들과 우선적 논의를 하게 됨. (자신의 입장에서만 전적으로 이야기 해주는)
- 가해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 점차 사건을 처리하는 행정적인 부분의 전문화만 늘어가는 듯. 궁극적으로 공동체 내에서의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이 두어지고 있는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 부분적으로 이는 제도화되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도 함.

② 끝나지 않는 문제

- 상담소의 권한에 대한 학내 구성원의 동의의 문제. 상담소의 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상담소에서의 일차적 처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외부의 법적절차로 사건이 이어짐
- 법적인 경우: 법적권한과의 경합-법적인 테두리내로 문제를 한정하고자 하는 법대교수들 (우리가 무슨 권한이 있다고) 법적인 자문을 받으려다가 오히려 족쇄를 치는 느낌.
- 법에서 허용하면 학내 결정이 무산되는가의 문제- 학교의 정책적 입장이 중요. 누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3. 해결방안을 고민하며

- 피해자의 처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학칙 개정의 필요성.
- 피해자 중심주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피해자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는 것, 혹은 사건을 보다 객관적으로 보도록 하는 것은 피해자 중심적이지

않은 시각과 동일한 것인가? 피해자중심주의는 가해자와 공존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피해자 중심주의”가 단지 말 그대로의 의미를 갖는 것인지, 그것의 의미와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

- 합리적인 기준 마련의 필요성: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선에서 사례의 집적을 통해 중재나 합의의 적정선을 만들어 낼 필요.
- 공동체 내에서 성폭력 가해자와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 출교하면 되는 것인가? 그렇다고 안할 것인가???
- 늘어나는 가해자 교육에 대한 요구. 이에 대한 충분한 사례의 집적과 연구가 필요. 보다 세분화된 프로그램이 개발 필요성.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분석

성폭력 처벌 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 분석

이경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I. 들어가며

사회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아져 있고, 정책적인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결코 바람직한 상황만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 요즘의 솔직한 심정이다. 오히려 지나치게 ‘오버’하는 정부나 정치권의 정책추진으로 인해 성폭력 범죄자를 엄하게 다루자는 정책에 반대 입장까지 표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상황들은 성폭력 근절의 의지를 함께 공유한다고 하여 그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까지 무조건 찬성하고 동의할 수는 없다는 점을 깨닫게 하며, 성폭력 정책에 있어 우선시 되어야 할 부분과 장기적인 안목 하에 꾸준히 추진되어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성찰을 요구한다.

이하에서는 최근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일련의 정책흐름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접근방향이 어떤 것인지 고민해보도록 하겠다.

II. “감시와 처벌의 강화”라는 성폭력 정책 흐름

1. 정부 및 정치권의 성폭력 관련 정책제안

정부는 이미 2007년 안양 초등학교 살해사건을 계기로 범정부 회의체인 「아동·여성보호대책 추진점검단」을 구성하여 종합대책(2008. 4. 30.)을 수립한 바 있으며, 2009년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국무총리실 주재에 의해 재차 「아동 성폭력 재발 방지대책」(2009. 10. 8.)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2008년의 종합대책에는 아동성범죄 법정형 상향 조정, 공소시효 제도 개선, 아동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인터넷 공개,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 도입, 전문가 참여제, 아동성폭력 전담센터 확대 및 아동·여성 ONE-STOP 보호·지원체계 강화,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의무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¹⁾. 2009년의 종합대책에는 양형기준 상향과 유기징역형 상한 확대, 전문가 참여제 확대,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전자발찌 부착기간 연장, 흉악범 얼굴 공개, DNA 정보수집, 놀이터·공원·학교 등에 대한 CCTV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²⁾.

2009년의 종합대책은 기존의 2008년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하여 내용상 큰 변화는 없으며, 국민들의 우려를 고려하여 보다 강화된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보도자료에서도 언급되어 있는 것과 같이, 전자발찌 강화, 흉악범 얼굴 공개, DNA 정보수집 등 ‘감시 및 처벌의 강화’라는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정치권도 예외는 아니어서, 전자발찌 부착기간의 상한을 30년으로 상향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발찌법’) 개정안³⁾, 흉악범 얼굴공개를 위한 성폭력특별법 개정안⁴⁾, 유기징역형 상향을 위한 형법 개정안⁵⁾, 주취 중 성범죄에 대한 감경 배제 및 가중처벌을 위한 형법 또는 성폭력특별법 개정안, 화학적 거세를 위한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적 거세법’) 제정안⁶⁾ 등의 법률안들이 제출되었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감시 및 처벌의 강화’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흉악범 얼굴 공개, DNA 정보 수집 등 정책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각 정책들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 평가해보기로 한다.

2. 전자발찌 확대

1) 국무총리실 2008. 4. 30.자 보도자료

2) 국무총리실 2009. 10. 9.자 보도자료

3) 이정선 의원 대표발의안(2009. 12. 11. 발의). 정부는 2009. 12. 29. 전자발찌 부착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적용 대상 범죄를 살인, 강도, 방화로 확대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2010년에는 전자발찌의 소급부착을 위한 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안(2010. 3. 11. 발의)과 박선영 의원 대표발의안(2010. 3. 12. 발의)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4) 박민식 의원 대표발의안(2009. 12. 14. 발의). 정부는 2009. 7. 21. 성폭력범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흉악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5) 박선영 의원 대표발의안(2009. 10. 5. 발의), 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안(2009. 10. 21. 발의), 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2009. 11. 26. 발의), 박민식 의원 대표발의안(2009. 12. 14. 발의)

6) 박민식 의원 대표발의안(2008. 9. 8. 발의)

가. 제도의 도입 및 확대 논의

전자발찌 제도는 2007년 4월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써(전자발찌법 제1조), 제정 당시에는 부착기간의 상한이 5년이였다(제9조 제1항). 전자발찌 제도는 법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부칙 제1조). 그런데 미처 법을 시행하기도 전에 안양 초등학교 살해사건 및 일산 초등학교 납치미수 사건 등이 발생하여 아동 상대 범죄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법무부는 2008. 6. 13. 곧바로 법을 개정하여 부착기간의 상한을 10년으로 상향하고(제9조 제1항), 2008. 9. 1.부터 법을 시행하도록 하여 시행시기를 앞당겼다.

2008. 8. 1.에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에 대하여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전자발찌법으로 개정되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9년 12월에는 전자발찌 부착기간의 상한을 30년으로 상향하고, 하한을 규정하는 내용(이정선 의원 대표발의안, 정부안) 및 적용대상 범죄를 살인, 강도, 방화로 확대시키는 내용(정부안)의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나. 개정안에 대한 검토

전자발찌 부착기간의 상한을 확대하는 문제는 사건에 따라 부착기간의 폭을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측면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합리적인 기준도 없이 무조건 강력한 제재만을 목표로 한다는 비판을 면하기가 어렵다. 즉, 2009년에 문제된 두 사건은 전자발찌 제도의 문제점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었으며, 전자발찌 제도가 시행된 지 불과 2년도 되지 않아 아직까지 부착기간의 상한이 지나치게 짧아서 문제가 발생한 사례 또는 예측이 제기된 바도 없는데도, 상한을 3배로 늘리는 것은 과도해 보인다⁷⁾.

7) 외국의 사례 중 종신기간 동안 부착을 허용하는 곳은 미국뿐이며, 나머지 국가들은 호주 빅토리아주 15년, 뉴질랜드 10년, 영국 8년, 프랑스 6년, 스페인 5년 정도여서, 이미 우리에게 앞서 전자감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이들 국가들과 비교하더라도 30년의 기간은 지나치게 장기간임을 알 수 있다(각 국가의 부착기간에 대하여는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더구나 부착기간의 하한에 대한 새로운 규정 역시 문제점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법정형 중 무기징역이 있으면 부착기간의 하한을 10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13세 미만의 사람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하한을 2배로 가중하고 있어, 이에 따르면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현행법상 최대기간이 10년의 두 배나 되는 20년이 하한으로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외국 입법례 중 하한을 규정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하한이 3년, 2년, 1년으로 규정되어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하여도 최대 3년의 하한만이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개정안이 어떤 근거에 의해 제안된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전자발찌 부착기간의 하한 및 상한을 과도하게 규정해야 할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고, 오히려 전자감시 제도를 먼저 도입한 유럽 및 미국에서는 장기간의 전자발찌 부착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바⁸⁾, 위 개정안들의 내용은 지나치게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⁹⁾.

전자발찌 적용대상 범죄를 살인, 강도, 방화로 확대해야 한다는 정부의 개정안은 이들 강력 범죄가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강력범죄라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에서 2008년까지의 4년간의 동종재범율을 살펴보면 살인 10.2%, 강도 27.4%, 방화 7.2%로서 일반범죄의 절도 44.9%, 사기 29.8%, 폭행 40.7%, 폭처법 위반 43.9% 등에 비해 매우 낮다는 점을 알 수 있다¹⁰⁾. 또한, 이미 전자발찌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강간 및 유괴 범죄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의 동종재범율은 각각 14.8%, 15.4%에 불과하여¹¹⁾ 재범율은 전자발찌 제도 도입의 근거가 되기 어려우며, 아직도 제도시행 초기인 만큼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 및 부작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그 확대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2010년 부산 여중생 성폭행살해사건 발생 이후 전자발찌의 소급적용까지 구체적

8) 이미 전자감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도 전자감시 제도를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장기부착의 부작용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6개월 이상의 전자감시는 부적절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한다. 김혜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적용가능성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16권 제3호, 2005, 245면

9) 개정안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전자발찌 제도의 시행기간이 짧아서 아직 그 실효성이나 부작용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10)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11) 위 검토보고 참조 여성부의 2007년 전국 성폭력실태조사(205면) 및 2009년 대검찰청 범죄현황분석을 통해서도 강간 등 강력범죄의 동종재범율이 일반범죄의 재범율보다 낮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으로 논의가 되었으며 결국 2010. 4. 15. 부착기간의 상한은 30년, 하한 규정, 소급적용 가능 및 부착요건의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다. 평가

전자감시제도는 사실상 수치형 또는 명예형과 같은 형사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져 이중처벌적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¹²⁾. 또한 현행 전자발찌 제도는 형의 종료 후에도 부착을 명하고 있어 사후적 보안처분으로서의 위험가능성도 있다는 점¹³⁾에서 제도의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¹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 시행과정에서 부착기간의 상한 및 하한 등에 대해 문제점이 발견된 사실이 없는데도 위와 같이 전자발찌 제도를 확대, 강화하려는 것은,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을 손쉽게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며 대표적인 포폴리즘적 성폭력 정책으로 볼 수 있겠다.

3. 화학적 거세

가. 제도의 도입

지난 2010. 6. 29.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¹⁵⁾”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여 사회적 공분을 사게 된 아동성폭력사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으로서, 2008. 9. 8. 화학적 거세와 관련된 첫 법률안이었던 박민식 의원안

12) 정현미, 성폭력범죄대책과 전자감시, 형사정책 제21권 제1호, 2009. 6, 333면

13) 한인섭, 성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 공익과 인권 제4권 제1호, 2007, 55면

14) 전자감시 제도의 도입을 찬성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도 과학적인 재범위험평가 및 치료, 감시 제도를 비롯해 형사사법기관과 지역사회차원의 연결망을 갖춘 이후에 보완적 수단으로 전자감시제도가 논의되어야 함을 지적한 바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성폭력범죄의 양형분석 및 재범방지를 위한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 방안, 2006년 연구용역과제, 176면

15) 이하 “성충동약물치료법”이라고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언론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화학적 거세’라는 표현을 병용하기로 한다.

인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된 지 약 2년여만의 일이다.

화학적 거세법에 대해서는 작년 조두순 사건 때도, 올해 초 김길태 사건 때도 입법적 도입이 문제되었으나 약물치료 대상자의 인권문제를 비롯하여 제도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되고 있다가 연이어 계속되는 아동성폭력 사건의 이슈화로 인해 여론이 비등하게 되자 여야 합의에 의해 전격적으로 도입되게 되었다.

그러나 법률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치료대상자의 동의 요구 여부와 관련하여, 기존의 박민식 의원안은 동의를 요구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도입된 성충동약물치료법은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갑자기 변경되어 단 하루만에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졸속입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는 국회법 위반 여부와도 관련되는데, 국회법 제59조에서는 제정법률안의 경우 충분한 논의를 위해 위원회에 회부된 지 20일을 경과하지 않으면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는 동조 단서 조항에 근거하여 하루만에 처리를 한 것이다. 그러나 성충동약물치료법의 시행은 1년간 유예되어 과연 어떤 점에 의해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황이 인정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남는다.

나. 성충동약물치료법의 문제점

화학적 거세는 비록 물리적 거세와는 달리 약물 투여를 중단하면 회복이 가능한 조치이지만 하나,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치이며, 약물로 인한 부작용¹⁶⁾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당사자의 진정성 있는 동의는 매우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¹⁷⁾. 이를 위해서는

16) 미국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약물인 ‘데포-프로베라’(MPA)의 경우 보고된 부작용으로는 체중증가와 혈압 상승, 여성화유방, 골밀도 감소, 일시적 성기능 장애, 정자수 감소, 빈혈 등이 있다. 박상열, 성범죄자처우의 새로운 동향과 그 과제, 성균관법학 제21권 제1호, 2009. 4, 162면 내지 164면 참조

17) 이호중, “아동성폭력 재범방지책의 인권법적 쟁점”, 아동성폭력 재범방지정책과 인권 토론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2010. 7., p.67; 조은경, “아동대상 성범죄자의 재범 억제를 위한 화학적 거세 법안 제정에 대한 소고”,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국회법제사법위원회, 2009, p.28; 김희균, 상습적 아동성폭력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 도입 가능성에 대한 연구, 형사법연구 제21권 제4호, 2009, p.281; 황성기, “상습적 성범죄 예방수단으로서의 거세에 관한 헌법적 고찰”, 공법한연구 제9권 제3호, 2008, p.134 등

당사자에게 처치와 관련된 모든 의학적 정보(부작용에 대한 고지를 포함하여)가 제공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료전문가와의 상담 역시 보장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충동약물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쟁점인 당사자의 동의 여부에 대해 아무런 사회적 논의나 공감대 형성도 없이 갑작스럽게 강제적 치료가 가능한 내용으로 법이 통과된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대로 법이 시행될 경우 필연적으로 위헌성에 대한 시비가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행법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에는 다른 경우와는 달리 치료대상자의 동의가 있어야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법무부의 논리대로라면 이처럼 수형자의 경우에만 동의를 요하게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수형자의 경우에는 치료비용의 부담을 치료대상자가 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형자라도 약물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치료명령이 부과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비용 부담을 달리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수형자의 경우에 동의를 전제로 한다고 하지만, ① 동意的 철회가 불가능하며, ② 치료명령의 위반시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는 강제적 의무가 발생하고(법 제35조), ③ 치료명령의 기간은 전적으로 법원에 의해 결정되며(법 제22조 제2항 제6호, 제3항), ④ 대상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치료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는 점(법 제29조 제2항, 제16조) 등을 고려하면, 동의를 전제로 하는 실질적인 의미는 거의 없다고 보인다. 결국 이는 가석방을 빌미로 한 강제적 치료명령의 소급적용 또는 허울뿐인 동의를 근거로 한 광범위한 약물치료 집행으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

마지막으로 화학적 거세는 그 자체로서 성폭력 범죄자의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약물투여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범행충동을 줄이는 효과를 가질 뿐이므로, 독립적인 처치로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리치료 또는 인지행동치료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현행법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심리치료 등을 병행하도록 하고 있으나(안 제11조), 문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심리치료 및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의 개발이 충분치 못하다는 점에 있다. 제대로 된 치료프로그램의 병행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화학적 거세는 단지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의미 없는 보복적 조치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다. 평가

화학적 거세 제도는 특수한 유형의 성범죄자에 대한 대응수단을 다양화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법의 내용이나 통과 과정 등을 볼 때 입법취지와는 달리 치료가 아닌 성범죄자에 대해 무분별한 보복성 조치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법 시행이 1년간 유예되기는 하였으나, 제대로 된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보완되어야 할 점이 매우 많으며 무엇보다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 현행법의 규정은 법 시행 전에 반드시 개정될 필요가 있다.

4. 흉악범 얼굴공개

흉악범 얼굴공개 논의는 성폭력 사건이 아닌 연쇄살인사건인 일명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시작되었으며, 조두순 사건을 통해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논의가 확대되었다. 흉악범 얼굴 공개는 그 자체로는 재범 예방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여론에 힘입어 박민식 의원이 2009. 12. 14. 대표발의 한 성폭력특별법 개정안과 정부가 2009. 7. 21. 제출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강법’) 개정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위 개정안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박민식 의원안은 수사기관의 판단만으로 단지 유죄의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자만을 대상으로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내용의 충돌 및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박민식 의원안에 규정된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를 살펴보면, 단지 ‘신상정보’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공개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있으며, 청소년 피의자의 경우 공개를 제한하는 등의 제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박민식 의원안의 내용은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내용을 사실상 사문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위헌의 소지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정부안¹⁸⁾의 경우에는 얼굴 등의 공개 목적을 국민의 알권리, 재범방지, 범죄예방 등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재범방지와 범죄예방의 목적이라면 현행법(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신상 공개제도와 같이 확정판결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며, 굳이 유죄판결도 받기 전인 수사단계에서 이를 공개할 이유는 없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수사단계에서의 얼굴공개 필요성의 근거는 국민의 알권리 밖에 남지 않게 되는데, 피의자가 얼굴공개 이후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나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피의자의 가족들이 부당하게 법익 침해할 가능성을 쉽게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알권리만을 우선하기는 어려우며, 적절한 이익형량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특히, 정부안에 의하면 공개결정의 주체를 검사와 사법경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얼굴공개 결정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공개결정의 주체를 검사로 일원화 하거나¹⁹⁾, 최소한의 내부통제 절차를 규정하여 인권침해 여지를 줄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안 중에서 결국 정부가 제출한 특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0. 4. 15. 공포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제8조의 2 제2항으로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주의규정을 추가되었으나, 구체적인 제도시행 과정에서는 신상공개의 기준 및 판단의 형평성 등에 있어 많은 문제들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5. DNA 정보 수집

정부와 정치권은 2009년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많은 정책제안을 하였으나 2009년에 입법화가 된 것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DNA정보이용법’) 1건에 불과하다²⁰⁾. 이 DNA정보이용법에 의하면 살인, 아동성폭력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흉악범죄를 저지른 수형인 또는 구속피의자로부터 DNA를 채취(제5조, 제6조)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뒤 향후 범죄수사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18) 정부안과 관련하여 얼굴공개에 대한 기존의 법률 및 경찰 내부지침의 내용, 외국 입법례, 찬반 논의 등에 대하여는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참조

19) 형사정책연구원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정부안에 대한 의견

20) 2009. 12. 29. 국회를 통과하여 2010. 1. 25. 공포되었다. 「제 할일 못하는 국회」, 동아일보 2010. 3. 10.자 기사 및 「조두순, 檢 숙원 해결사?」, 서울신문 2009. 12. 31.자 기사 참조

DNA정보이용법은 원래 17대 국회 당시인 2006. 8. 1. 정부안인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으로 제출되었으나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으며,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2009. 10. 29. 다시 정부안으로 제출된 뒤 불과 두 달여 만에 국회를 통과하였다.

DNA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는 범죄 발생시 조속한 범인 검거에 일정 부분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되나, 다른 한편으로는 DNA정보가 매우 민감한 생체정보라는 점에서 관리주체에 의한 정보의 남용, 유출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해킹 가능성 등 문제점이 우려되는 지점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DNA정보이용법의 내용 중 구속피의자의 DNA를 채취하는 것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점 및 장래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현재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대법원 및 대한변호사협회는 수형인에 대한 DNA채취는 형집행 종료시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²¹⁾.

무엇보다 2009년에 이슈화되었던 청주 지적장애아동 성폭력 사건이나 조두순 사건의 경우 DNA정보의 활용이 전혀 문제된 사실이 없음에도, 많은 성폭력 관련 법률안 중 유독 DNA정보이용법만 국회를 통과하였다는 점에서 검찰이 조두순 사건 등으로 인한 여론을 이용하여 사회적으로 민감한 국가의 형벌권 강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²²⁾. 특히 성폭력 범죄는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가해자와 피해자가 원래부터 아는 사이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²³⁾, 가해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에 활용되는 DNA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가 성폭력 관련 대책 중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러한 의구심은 더욱 커진다.

향후 법집행 과정에서 정보 유출 또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세밀한 검토와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1)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참조. 그러나 이와 같은 의견에도 불구하고 본래 정부안대로 입법이 되었다.

22) 서울신문 2009. 12. 31.자 앞의 기사.

23) 2007년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통계에 의하면 아는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전체 사건의 약 83%에 이른다.

Ⅲ. 성폭력 관련 정책의 우선 순위와 가해자 인권 담론

성폭력 사건들과 관련된 통계수치를 고려하면 의미심장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신고율 10%, 기소율 40%, 징역형의 실형 선고율 28%, 여기까지만 고려하더라도 전체 성폭력 사건 중 실형이 선고될 확률은 약 1.2%에 불과하다. 그런데 전자발찌와 화학적 거세 제도 등 최근에 도입된 제도들은 기본적으로 중형을 선고받는 경우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므로(화학적 거세는 피해자가 16세 미만, 가해자는 19세 이상이라는 제한도 있다), 이를 고려하면 전자발찌와 화학적 거세 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 비율은 결국 전체 성폭력 사건 중 거의 1% 미만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수치는 과연 현 시점에서 어떤 성폭력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제도에 필요한 예산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한다. 2009년 및 2010년의 전자발찌 관련 예산은 45억 원 이상이며, 화학적 거세의 경우 첫 해의 필요예산은 약 9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그런데 여성가족부 예산 중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관련 예산은 6억 1,700만 원이었으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지원 예산은 5억 500만 원에 불과했다(2007년 기준). 위와 같은 내용들은 단지 전자발찌와 화학적 거세가 제범방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그러한 효과가 실제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

따라서 성폭력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특정 유형’의 성폭력 사건에만 특수하게 적용되는 정책보다는 ‘전체 성폭력 범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개별 범죄자에게 초점을 맞춰 그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가해자에 대한 교육교화 및 성폭력 피해예방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우리 사회의 성문화와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위와 같은 강력대책들이 다소 인권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해자의 인권일 뿐이며,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이므로 당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성폭력 관련 정책들에 대한 인권적인 문제를 ‘가해자 인권 대 피해자 인권’의 단순 대립구도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이는 오히려 ‘합헌적 정책 대 위헌적 정책’의 구도로 볼 필요가 있다. 즉, 가해자의 인권도 우리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에 포함되며, 근시안적인 계산으로 인해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쉽게 무시하게 되면 피해자의 인권 역시 헌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²⁴⁾. 헌법적 가치를 준수하여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가해자나 피해자 어느 한 쪽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권리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올바른 성폭력 정책의 마련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24) 인권·사회단체들은 정부가 강력사건들을 빌미로 권위주의적인 형사정책을 추진해 새로운 공포정치를 의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처벌위주 대책 '공포정치' 우려」, 내일신문 2010. 3. 23.자 기사



실제 사례로 보는 성폭력 가해자 행동분석

고려진 (경기대학교 범죄과학센터 선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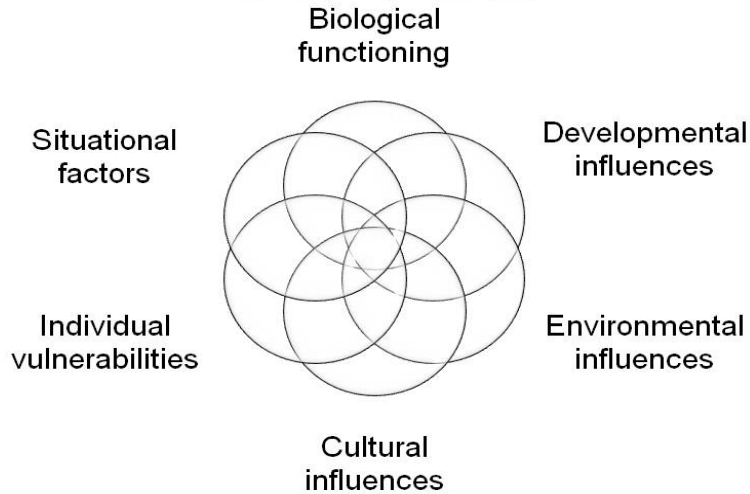
성범죄자들과 성범죄

고 려 진
경기대학교

성범죄의 원인론

- 신경생물학적 원인
- 애착의 문제
- 사회 학습의 영향
- 인지의 왜곡
- 개인적 결함
- 통합적 접근 → 성범죄의 원인론은 단일 요인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완전, 더욱 포괄적이고 다차원적 모델이

통합적 접근



3

성범죄의 원인론

- Finkelhor's Precondition Theory(1984)
 - Emotional congruence
 - sexual arousal
 - blockage
 - disinhibition
- Hall & Hirschman's Quadripartite Theory(1992)
 - Physiological sexual arousal
 - inaccurate cognition that justify sexual aggression
 - affective dyscontrol
 - personality problems

성범죄의 원인론

- Marshall & Barbaree's Integrated Theory(1990)
 - Individuals experiencing developmentally adverse events
 - Poor social and self-regulation skills
 - Transient situational elements
- Ward & Siegert's Pathways Model(2002)
 - Intimacy and social skill deficits
 - Distorted sexual scripts
 - Emotional dysregulation
 - cognitive distortions

General Rapist Typologies

Sexually Motivated

Compensatory: Offender uses only as much force as necessary to achieve sexual gratification; may have "courtship disorder"; feelings of inadequacy; "gentleman" rapist

Sadistic: Offender achieves sexual gratification through pain and/or fear from the victims; often psychopathic; offense may lead to sexual murder

Non-Sexually Motivated

Power/Control: Offender desires power and dominance over the victim; sometimes the motivation is humiliation, degradation; the offender is often angry; an aggressive, pseudo-sexual act

Opportunistic: Recreational/situational offender who leads impulsive, adventure-seeking lifestyle; assault often committed during another offense

summary by Robertiello & Terry. (2007)

Typologies

Child Molesters

Fixated

Regressed



(Groth & Birnbaum, 1978)

7

아동치한범 및 소아기호증자

- 소아기호증자: 어른보다는 아이들에게 성적인 기호를 가진 자
- 아동치한범: 아이를 대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

DSM-IV의 소아기호증 진단 기준

- A. 사춘기 이전의 소아나 소아들(보통 13세 이하)을 상대로 한 성행위를 중심으로 성적 흥분을 강하게 일으키는 공상, 성적 충동, 성적 행동이 반복되며,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된다.
- B. 이러한 공상, 성적 충동이나 행동으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수반되고, 사회적, 직업적 또는 기타 중요한 삶의 영역에서 장애를 초래한다.
- C. 나이가 적어도 16세 이상이며 진단 기준 A에 언급된 소아들보다 적어도 5세 연상이어야 한다.

주의: 12세 또는 13세 소아와 성관계를 맺고 있는 후기 청소년기의 청소년들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Child Molesters & Pedophiles

- 소아기호증자
 - 진짜 소아기호증자는 아이들에게서 성적 매력을 느끼고 힘없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적 범죄를 저지른다.
 - 아이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직업을 갖기를 원하며, 신뢰롭고 권위를 가진 지위에 있을 수 있다.
 - 성인과의 친밀한 관계에 매우 부적응적이고 그들의 인생 대부분을 아이들 주변에서 보낼 수도 있다. 아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성인과의 관계를 이용할 수도 있다.
 - 자신의 가족 내에서 피해자를 찾을 수도 있다.

Child Molesters & Pedophiles

- 소아기호증자
 - 흉악한 소아기호증자(특히 피해아동이 남아일 때)가 일반 성범죄자보다 재범을 할 확률이 훨씬 높다. (연구에 의하면, 반 이상이 재범한다고 알려짐)
 - 고착형: 영구적으로 성적 관심을 성인에게보다는 아이에게 두는 경우; 간혹 성인과 성적 접촉을 하긴 하지만 우연한 기회일 뿐; 대부분 미혼; 대부분 낮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피해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는 거의 없음
 - 미국의 경우: 피해아동이 남아일 경우가 여아일 경우보다 7배가 더 많다.

11

Child Molesters & Pedophiles

- 소아기호증이 아닌 아동치한범
 - 성적관심은 성인에게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감정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름
 - 성인 파트너에게 친밀한 관계를 갖기 쉽지 않거나, 자존감이 낮거나, 외로움이나 무력함에서 벗어나고자
 - ⇒ 이 경우 가해자는 결혼을 했거나 동료들과 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을 수도 있다.

12

Child Molesters & Pedophiles

- 소아기호증이 아닌 아동치한범
 - 근친상간범의 대부분(많은 이성애적 근친상간범은 보통의 남성과 성적관심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 ⇒ 많은 근친상간범은 친족 이외의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 퇴행형: 초기에는 성인에게 성적관심을 갖지만, 나중에 성적관심을 아이들에게 돌린다; 친밀한 관계의 아동을 대상으로; 상황적 스트레스(결혼생활의 문제, 직업상 문제 등)로 인해 "가짜 어른"으로 아이들을 대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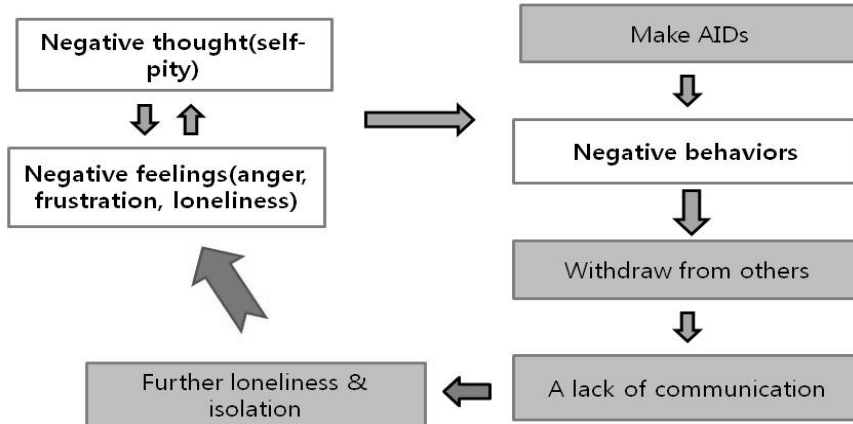
13

Child Molesters와 회유(조종)

- 폭력이나 강제보다는 회유적인 방법이 아동에게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
- **Grooming** is a premeditated behavior intended to *manipulate the potential victim* into complying with the sexual abuse.
- Including verbal and/or physical coercion, seduction, games, and enticements

14

Cycle of Sexual Offending



15

Cycle of Sexual Offending

- 부정적 사고 - 부정적 감정 - 부정적 행동 사이클 형성
- 일탈적 성적 환상을 하기 시작
- 이러한 환상은 궁극적으로 자위 행위 & 쾌감
- 이로 인한 정적 강화는 부정적 사고와 감정이 줄어들게 하고 부정적 행동을 강화시킴
- 잠재적 피해자를 목표로 일탈적 성적 환상을 리허설하게 됨
- 이는 외현적 일탈 행위를 하게 되는 시초가 됨
- 범죄를 계획하고 피해자 회유
- 피해자를 물색하면 범죄 실행
- 성적 긴장감의 해소 그러나 또 다른 부정적 감정(불안, 공포 등)
- 자신의 범죄 행위를 합리화 함
- 자신의 원래의 부정적 사고와 감정은 해결되지 않음
- 지속적인 범죄

16

범죄 행위의 지속성

- 아동 대상 성범죄와 관련된 왜곡된 사고 (Ward, 2000; Ward & Keenan, 1999)
 - Offenders view children as sexual objects.
 - Sexual behavior is not harmful.
 - The world is dangerous.
 - Offenders are entitled to the sexual behavior.
 - The offender has a lack of control.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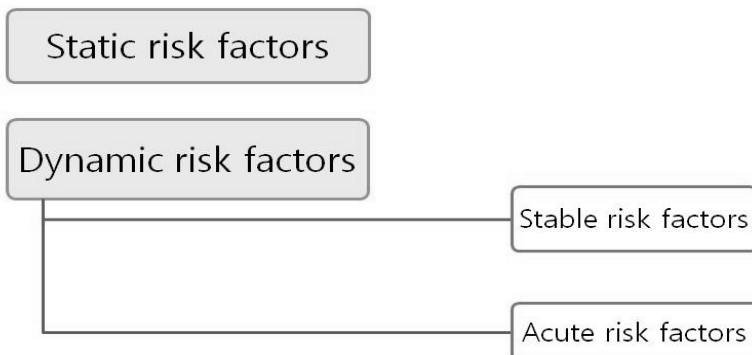
범죄 행위의 지속성

- 범죄 행위의 합리화와 관련된 왜곡된 사고 (Marshall, Anderson, & Fernandez, 1999)
 - 부인(denial)
 - ✓ 피해자가 금전적 보상을 받으려 한다.
 - ✓ 기억 상실
 - ✓ 피해자가 동의했다.
 - 최소화(minimization)
 - ✓ 피해자가 유혹했다.
 - ✓ 술에 취했다.
 - ✓ 나는 사랑했다.
 - ✓ 그냥 일어난 일이다.

범죄 행위의 지속성

- 미디어 매체를 통해 촉진되는 4가지 학습과정 (Ellis, 1989)
 - ① 미디어 매체에 묘사되는 여성에 대한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모방
 - ② 성행위와 폭력성을 묘사한 매체를 봄으로 인해 성행위와 폭력을 연합시킴
 - ③ 그러한 미디어 매체를 통해 강간신화가 강화, 지속됨
 - ④ 미디어 매체의 중독으로 성적인 공격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성적인 공격에 수반되는 고통, 공포, 모욕감 등에 대해서 관대한 태도를 지니게 됨
- 강간신화는 범죄적 성행위에 대한 합리화, 정당화를 용이하게 함: '중화기법'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sexual offense recidivism



Static Risk Factors

Developmental factors	Sexual interest factors	Forensic factors	Clinical factors
Juvenile sexual offences	Male victim	Past criminal history	Age of offender
Poor family background	Paraphilias (atypical sexual outlets)	Past sexual convictions	Lower IQ
Victim of sexual abuse		Past violent convictions	Marital/relationship history
		Time spent in custody	Discontinuation in community treatment programs
		Non-contact sex offences	Psychopathy(PCL-R)
		Stranger victims	
		Multiple victims	

21

Stable Dynamic Risk Factors

Sexual interest factors	Clinical factors
Deviant sexual urges	Cognitive distortions
Sexual deviance-children (PPG)	Lack of victim empathy
Attitude tolerant of sexual assault	Low self-esteem
	Anger
	Substance abuse
	Impulsivity
	Personality disorder

22

Acute Dynamic Risk Factors

Sexual interest factors	Treatment behavior factors	Clinical factors
Frequency of sexual fantasies	Delinquent behavior during treatment Deterioration in dynamic risk during treatment Poor treatment cooperation Deterioration in awareness of high risk situations and relapse prevention strategies Short duration of treatment programs Poor cooperation with supervision	Isolation Unemployment Deviant social influences Chaotic lifestyle Poor social support Affective disorders Substance abuse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및 외국 사례 소개

아동 대상 성범죄 통제 정책의 기초와 심리치료의 필요성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본 논문에서는 대한민국 여성과 아동의 안전에 가장 심각한 문제로 드러난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국내 정책의 전반적 흐름을 살펴보고 최근 도입한 정책의 집행에 있어 심리학적 주제가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지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자감독과 거세약물의 집행에 있어 심리평가도구를 포함한 위험평가절차가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성범죄자의 교정 역시 인지행동치료를 포함한 심리치료의 방법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국내의 사법제도 내에서도 이와 같은 외국의 사례가 치밀하게 도입되어야 국회를 통과한 여러 가지 법령들이 시행착오 없이 집행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아동 대상 성범죄, 소아성기호증, PPG, Abel test, 성범죄재범율, 인지행동치료

서론

안전에 대한 욕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이런 기본 욕구를 위협하는 범죄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나 존재해 왔다. 날로 다양해지고 발전해가는 여러 범죄 중에서도 사회적, 신체적 약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는 그 죄질이 더욱 나쁘며, 대다수의 사회구성원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불러일으킨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성범죄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5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중 강간만이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며, 전년도에 대비해 2006년에는 15.4%, 2007년에는 19.6%, 2008년에는 1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경찰청 홈페이지, 2009). 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일반범죄가 10.1% 증가한 데 비해, 성폭력범죄는 83.4%나 늘어나 일반범죄의 증가율을 크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형사정책연구원, 2007).

최근 국내에서는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보호를 받아야 할 약자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잇달아 발생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사건은 2003년 642건, 2004년 721건, 2005년 738건, 2006년 980건, 2007년 1081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수치만으로 보더라도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아동성폭력사건은 439건(68.4%)이 늘어난 셈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아동 안전

지표체계 구축 및 개발'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동인구 10만 명 당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의 수가 2005년 9.13명에서 2008년 에는 15.81명으로 무려 73.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성범죄는 암수율이 높으며 우리의 문화·정서 특성상 성범죄의 신고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위의 수치보다 더 많은 성범죄가 일어났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특히 아동 대상 성범죄의 경우,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못 하는 경우가 실제 신고 건수의 10배가 넘는다는 추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다면 실로 놀라운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세계일보, 2008). 높은 발생률뿐만 아니라, 아동 대상 성범죄는 최근 그 형태와 양상이 날로 더 흉악해져가고 있다.

하지만 성범죄, 그 중에서도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처는 적절하지도 효율적이지도 못하여왔다. 사실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흉악한 성범죄가 저질러질 때마다 정부는 예방책이나 적절한 대처법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제도와 전자발찌 착용 등이 시행되었고, 2010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허점은 여전히 존재하고, 그 틈새를 유유히 통과한 범죄자들은 별다른 제재 없이 제2, 제3의 피해자를 계속해서 양산하고 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경우,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매수범, 강간범, 강제추행자 등에게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우고, 해당 지역사회 주민들이 가해자의 거주 사실을 알 수 있게 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 그 목적이다. 하지만 신상공개제도에 대해서 가해자 인권침해 논란과 함께 몇 가지 문제점이 예견된다. 이는 우리보다 훨씬 앞선 1994년에 메건법을 제정한 미국의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로 인해 무고한 이가 범죄자로 오인되거나 오해로 인해 신체적·물질적 피해가 발생하고, 범죄자 노출이 그 가족에게까지 이어져 고통을 받거나, 피해자가 알려져 2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 외에도 신상공개 후, 적절한 관리나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 다른 범죄로 발전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었다(Freeman-Longo, 1996). 또 2008년 9월부터 시행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은 처벌 위주의 특성을 띤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비해 사회 내 처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형사정책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1980년대 후반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상당한 재범방지효과가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전자발찌 제도의 경우, 감시받고 있는 동안만 범죄억제 효과가 있어 궁극적으로 재범을 막기에는 충분치 않다(법무부, 2009)는 논쟁이 있다. 전자발찌 제도를 시행한 지 불과 3개월 후, 전자발찌를 찬 채 여성을 마구 때린 후 성폭행 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현재 우리의 상황에서는 학교 등 특정 지역에 대한 출입금지나 접근금지 명령 등이 함께 부과된 경우가 드물어서 예방 조치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다(중앙선데이 뉴스, 2009).

이처럼 현재 우리의 성범죄자 관리 체계는 그 유용성과 효과성에 대해 검증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집 안, 학교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끔찍한 범죄의 발생만으로도 사회적 파장은 매우 크다. 하지만 연속되는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안전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국민들은 더욱 불안을 느낌과 동시에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성범죄의 재발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치료적 접근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 범죄자와 다른 특징을 나타내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으며, 치료의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연구나 프로그램의 시행이 매우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와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주요 연구들을 개관하여 다음의 내용들을 다루고자 한다.

첫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정의와 특성, 유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둘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적 개입의 필요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셋째, 치료 대상자 선별 및 예후를 위한 평가 방법을 살펴보고 넷째, 구체적인 치료방안인 약물치료와 인지행동치료에 대해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외국의 사법제도 내에서 교정심리치료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론

1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이해

1)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정의

아동 대상 성범죄자라고 하면 흔히 소아기호증(pedophilia)을 함께 떠올리게 된다. 이 두 용어는 자주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지만,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우선 소아기호증(pedophilia)은 임상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에 의해 내려지는 임상적 진단 명으로서 일종의 정신장애라고 볼 수 있다. 임상장면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진단 체계인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 제 4판(DSM-IV)에 의하면, “사춘기 이전의 소아(보통 13세 이하)를 상대로 한 성행위를 중심으로 성적 흥분을 강하게 일으키는 공상, 성적 충동, 성적 행동이 반복되며,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소아기호증으로 진단된다. 또한 이러한 공상, 성적 충동이나 행동으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수반되어야 하며, 사회적·직업적 또는 기타 중요한 삶의 영역에서 장애가 초래된다. 가해자의 나이가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피해자보다 적어도 5세 연상이어야 한다(APA, 1994). 다시 말해, 소아기호증자들은 성인이 아닌 소아에게 분명한 성적 선호를 나타낸다. 소아기호증자(pedophile)들 중 6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성적인 각성을 일으키는 이들도 있으나(hebephilia), 더 많은 수의 소아기호증자들이 10세 내외의 아이들을 피해자로 삼는다(Erickson, 1988). 또, 자신의 가정 안에서 피해자를 물색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소아기호증자들은 외부에서 대상을 구한다. 이들이 아동과 관계를 형성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이들을 통해 성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이다. 이들은 성인과 친밀한 관계를 잘 맺지 못하며, 성적 대상을 구하기 위해 아이들의 곁을 맴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성별이거나 소년과 소녀 둘 다에 해당할 경우, 치료가 더 어렵고 높은 재범률을 나타낸다(Holland, Zolondek, Abel, Jordan & Becker, 2000). 일생 동안 수십, 수백 명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에 비해 아동치한(child molester)은 전문가에 의해 내려지는 진단이 아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뜻한다. 이들의 일차적인 성적 대상은 성인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아동을 이용해 성적 만족

을 얻는다(Hall & Hall, 2007; 고려진 & 이수정, 2008). 이들은 자기존중감이 낮고 정서적 처리가 미성숙하며, 대인관계기술이 부족해 성인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문제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Gudjonsson, & Sigurdsson, 2000). 무력감이나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와 같은 정서적 요인이 이들의 성폭력범죄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대개 이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성별에 관계없이 상대적으로 피해자 수가 적은 편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치한 혹은 아동추행은 피해자가 아동인 성범죄로서, 소아기호증보다 훨씬 광범위한 개념이다. 즉, 모든 소아기호증자는 아동치한이지만, 모든 아동 대상 성범죄자가 소아기호증자라고 볼 수는 없다(Hall et al., 2007). 한 연구에 따르면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1/4정도만이 소아기호증자라고 한다(Wiliam & Finkelhor, 1990). 이 논문에서는 소아기호증자가 아닌 대상자, 즉 피해자가 아동인 아동 대상 성범죄자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2)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유형과 특성

(1) 고착형(fixated)과 퇴행형(regressed)

아동 대상 성범죄자를 분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 비교적 간단한 분류법으로 고착형(fixated)과 퇴행형(regressed)을 들 수 있다(Groth & Birnbaum, 1978).

고착형(fixated)은 성심리 발달단계에서 더 이상 발달하지 않고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뜻하며, 이들은 자신과 비슷한 연령을 가진 여성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퇴행형(regressed)은 성심리적 발달단계 중에서 한 단계에만 머무르는 고착형과는 달리, 성인 파트너와 정상적인 관계를 가지기도 하지만, 스트레스 등의 촉발 요인이 있을 때 비교적 손쉽게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 소아에게서 성적인 만족을 얻는 특성을 가진다.

(2) 상황형 아동 대상 성범죄자(situational child molester)와 아동선호형 아동 대상 성범죄자(preferential child molester)

Groth 등(1978)의 두 가지 유형을 기초로 하여 FBI는 아동 대상 성범죄자를 상황형 아동 대상 성범죄자(situational child molester)와 아동선호형 아동 대상 성범죄자(preferential child molester)로 크게 두 종류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각각에 하위유형을 둬으로써, 위의 이분법을 좀 더 세분화시켰다.

먼저 상황형 아동 대상 성범죄자는 퇴행형(regressed), 도덕적 무차별형(morally indiscriminate), 성적 무차별형(sexually indiscriminate), 부적응형(inadequate)으로 나누어진다(Robertiello & Terry, 2007; 고려진 등, 2008).

퇴행형(regressed)은 자존감이 낮고 정서 처리가 미숙하다. 또 성인간의 관계에 대한 대처 기술이 부족하여 아동을 성인의 대체물로 사용하며, 성적인 학대를 한다.

도덕적 무차별형(morally indiscriminate)은 특별히 아동에게서 성적 매력을 느껴서라기보다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선택하다보니 아동이 그 대상이 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유형의 가해자들은 유인이나 강압 또는 속임수를 사용하여 아동을 끌어들인다.

성적 무차별형(sexually indiscriminate)은 실제로 소아기호적 성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한 대상으로 아동을 이용한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성적인 실험을 하고 다양한 종류의 포르노를 수집할 가능성이 있다.

부적응형(inadequate)은 사회적응 능력이 부족하고 낮은 자기존중감을 가지고 있다. 이 유형에는 정신병이나 정신지체를 가진 자들을 포함된다.

〈표 1〉 상황형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분류와 특성

상황형	특성
퇴행형	자존감 낮음, 정서처리 미숙. 아동을 대체물로 여김. 성적 학대
도덕적 무차별형	아동에게 성적 매력 느끼지 않지만 우연한 기회에 아동 선택
성적 무차별형	성적 만족의 대상으로 이용. 성적인 실험. 포르노 수집 가능성
부적응형	사회적응 능력 부족. 낮은 자기존중감

두 번째, 아동선호형은 확실히 아동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는 타입으로 유혹형(seduction), 내향형(introverted), 가학형(sadistic)으로 나뉜다(Robertiello et al., 2007; 고려진 등, 2008).

유혹형(seduction)은 아동의 주의를 끌기 위해 애정을 표현하거나 선물 등을 제공하며 아동을 유혹한다. 피해자가 여러 명일 수 있으며, 정체가 발각되거나 피해자의 도망을 방지하기 위해 위협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내향형(introverted)은 심리성적으로 미숙하여 아이들을 유혹하는 기술이 부족하다. 이들은 주로 낯선 아이나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아이들로부터 애정을 얻고자 한다.

가학형(sadistic)은 아동에게 심리적 또는 신체적 고통을 가함으로서 성적 만족을 얻고자 한다. 낯선 아동을 대상으로 삼으며, 다분히 공격성을 띄므로 아동 살해 등으로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표 2〉 아동선호형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분류와 특성

아동선호형	특성
유혹형	아동 유혹하기 위해 애정 표현, 선물 제공, 위협, 폭력 사용
내향형	심리성적인 미숙, 낯설거나 어린 아동, 애정 갈구
가학형	고통을 주며 성적 만족 얻음, 공격성 높고 위험함

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적 개입의 필요성 - 재범율과 치료효과

사법적 의사결정을 위한 위험성 평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은 재범율이다. 재범율이 높은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재범율 감소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것은 국제적 경향이다. 외국의 경우,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하여서는 정부 차원에서 치료적인 접근과 재범율 감소 정책의 발굴에 적극적 연구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재범율에 대한 연구결과는 방법론상의 요인들로 인해 그 편차가 심하다. 방법론상의 요인 중 첫 번째는 재범율의 정의에 관한 것이다. 연구자들 간에 재범율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각기 다른 기준으로 재범을 정의하고 있다. 성범죄 재범율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하는 두 번째 문제는 대부분의 통계들은 공식적인 기록을 통해 조사된다는 사실이다. 성범죄는 그 특성상 암수화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Groth 등(1982)은 익명성을 보장해주고 성범죄자를 조사한 결과, 범죄 수가 공식 기록의 최소 2배 이상으로 나타난 것을 경험한 바 있다(Groth, Longo, McFadin, 1982). 세 번째 유의해야 하는 요건은 재범추적 조사의 기간이 각기 다르다는 점이다. 적게는 1년에서 많게는 25년의 기간을 두고 재범율을 조사하다보니, 그 결과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다. 보통 5년 이하의 추적 기간은 정확한 재범율을 측정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라고 평가된다(Doren, 1998; Soothill, Harman, Francis & Kirby, 2005). 하지만 추적 기간을 길게 하면 재범율은 높아진다(Langevin, Curnoe, Fedoroff, Benett, Langevin & Peever, 2004).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하는 점은 성범죄자라고 해도 그 유형이 각기 다르기에 연구 대상의 구성에 따라서 재범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Kilpatrick, Edmunds & Seymour, 1992).

1) 재범율

성범죄의 재범율에 대하여 Gibbens 등(Gibbens, Soothill, & Way, 1978)은 4%, Grunfeld와 Noreik(1986)은 10%, Hanson과 Bussiere (1998)은 13%로 낮게 보고하였다(Gibbens, Soothill & Way, 1978; Grunfeld & Noreik, 1986, Hanson & Bussiere, 1998). Prenky 등은 추적 기간에 따른 재범율을 조사하는데, 강간범은 추적기간이 1년일 경우 재범율 9%, 5년은 19%, 10년은 26%, 25년은 39%로 나타났다. 또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율은 추적 기간이 1년이면 6%, 5년이면 19%, 10년이면 30%, 25년이면 5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Prenky, Knight & Lee, 1997). 다른 연구에서는 아동 대상 성범죄 중, 여아 성추행의 경우 10~29%, 남아 성추행의 경우 13~40%의 재범율을 보고하였다(Marshall & Barbaree, 1990). 61개의 선행연구를 메타 분석을 한 결과,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율은 12.9%인 것으로 나타났다(Hanson & Hussiere, 1998). Doren(1998)의 연구에서는 아동 대상 성범죄자 재범율이 52%로 나타났다. 25년의 추적 기간에 따른 재범율 연구에서는 가족이 아닌 외부에서 아동을 선택한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약 70%, 자신의 아이에게 성적 학대를 한 경우에는 약 50%가 재범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Langevin et al., 2004).

외부에서 대상자를 물색하거나 이전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성범죄를 이룬 나이에 저지르기 시작하였거나 피해자가 남자 아이인 경우 또는 미혼인 경우에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율이 높게 나타났다(Bartol & Bartol, 2008; Doren, 1998; Hanson et al., 1998; Freindship & Beech, 2005; Levenson & Morin, 2006). 또 아동에 대한 성적 선호, 정신 병리, 성격장애, 충동성, 피해자에 대한 공감 결여, 인지왜곡, 알콜 중독, 낮은 IQ와 학습장애가 높은 재범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ogaerts, Delclerca, Vaheule & Palmans, 2005; Craig & Hutchinson, 2005; Hanson, 2002; Blumenthal, Gudjonsson & Burns, 1999; Firestone, Bradford, McCoy, Greenberg, Larose & Curry, 1999).

2) 치료효과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와 재범율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자면, 12개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메타 분석을 실시한 결과($N=1,313$), 치료를 받은 성범죄자 집단의 재범율은 19%였고 비치료 집단의 경우 27%로 나타났다(Hall, 1995).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4년 후 조사에서는 치료 집단 18%, 비치료 집단 43%가 재범하였다(Barbaree & Marshall, 1998). 80개의 성범죄 치료결과를 분석한 Alexander(1999)의 연구에서는 치료 집단과 비치료 집단의 재범율이 각각 7.2%와 17.6%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미국 ATSA(Association for the Treatment of Sexual Abusers)의 보고서(2000)에 따르면 참여집단과 비참여 집단의 재범율이 각각 10%와 17%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296명의 성범죄 치료 집단과 283명의 비치료 집단의 6년 후에 재범 추적 조사를 해보니, 재범율이 14.5%와 33.2%인 것으로 보고되었다(Nicholaichuk, Gordon, Gu & Wong, 2000). Hanson의 2002년 연구에서는 치료 집단의 성범죄 재범율이 9.9%로 비치료 집단의 성범죄 재범율이 17.3%인 것으로 나타났다(Hanson, 2002). 69개의 연구결과($N=22,000$)를 종합하여 성범죄자의 재범율을 추적한 한 연구에서는 비치료 집단에 비해 치료 집단의 재범율이 37% 더 낮았다고 한다(Lösel & Schmucker, 2005).

3. 치료 대상자 선별 및 예후 평가(assessment)

성범죄자에게 치료 처우를 적용할 경우,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하는 선정 기준 마련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적절한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 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못지않게 치료가 끝난 후 치료효과를 측정해내는 일 또한 중요하다.

1) Penile Plethysmograph(PPG)

성적 자극에 대한 음경의 반응을 직접 측정하는 방식(phallometric assessment) 중의 하나로 오디오나 비디오 자극의 반응에 따라 음경의 혈류 변화(발기)를 측정하여 신체적 각성 정도를 평가하는 도구이다. 성적 자극은 비정상적 선호자극부터 정상적 선호자극까지 다양한 자극을 제시하고 성적 각성에 대한 반응의 차이를 평가한다.

PPG가 성적 기호를 측정할 것이라고 전제하는 근거는 성기 반응이 성적 욕망을 의미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성적 흥분은 성기의 반응으로 발현되며, 성적 욕구를 나타낸다고 보는 것이다(Rempel & Serafini, 1995). 따라서 특정 자극 유형에 대한 성기의 반응은 그 자극에 대한 성적 욕구를 나타내는 것이며 성적 기호를 의미한다(Kalmus & Beech, 2005).

〈표 3〉 성범죄 재범 예측인자

위험 요소	r	n(k)
성적 일탈		
아동에 대한 PPG 성적 선호	.32	4,853(7)
일탈적 성적 선호	.22	570(5)
이전 성범죄 경력	.19	11,294(29)
일부 낯선 피해자	.15	465(4)
저연령에서 시작됨	.12	919(4)
무관계 피해자	.11	6,889(21)
소년 피해자	.11	10,294(19)
다양한 성범죄 경력	.10	6,011(5)

위험 요소	r	n(k)
범죄경력 / 생활 양식		
반사회적 성격	.14	811(6)
이전 범죄	.13	8,683(20)
인구통계학적 요인		
연령	.13	6,969(21)
미혼	.11	2,850(8)
치료 전력		
치료 중도탈락	.17	806(6)
주 : r은 Hanson & Bussiere(1998)에서 산출된 평균 상관계수이며, k는 연구수, n은 전체 사례수이다. 자료 : Hanson, 1997; Winick & La Fond, 2003; 법무부 미국 성폭력 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의 실태 연구에서 재인용, 2007.		

PPG는 전통적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Barbaree, 1990; Quinsey & Earls, 1990). 여러 연구에서 PPG가 소아기호증과 비소아기호증의 구별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Miller et al., 2005). 또 성범죄의 여러 재범 예측인자 중 PPG로 아동에 대한 성적 선호의 측정한 것이 가장 상관이 높았다(Hanson, 1997)(표 3 참조). 특정 자극에 대해 자기 보고한 성적 흥분의 정도와 PPG 결과 사이에는 매우 강한 정적 상관관계가 존재하며(Strassberg, Kelly, Carroll & Kircher, 1987), 내적 신뢰도 또한 우수하다(내적 합치도: .82~.91)(ATSA, 2005).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용도 면에서 보자면 여러 한계점이 존재하는데, 개인의 매우 사적인 영역인 성적 흥분을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노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인권 침해의 문제가 항상 제기된다(고려진, 2009). 또한 도구의 사용과 결과 해석에는 장기간의 전문점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과 비싼 비용 또한 문제가 된다(고려진, 이수정, 이소현, 2009). 대상자가 성적 흥분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거짓 반응의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시각 반응 시간 측정 - Abel Assessment for Sexual Interest(AASI, 2001)

시각 반응 시간(VRT) 측정 방식을 사용해 대상자가 특정 유형의 자극을 응시하는 시간을 측정하여 다른 유형의 자극의 응시 시간과 비교하여 성적 기호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자신에게 매력적인 자극을 매력적이지 않은 자극이나 중성 자극에 비해 더 오래 볼 것이고 이러한 시각 반응 시간을 측정하는 것은 성적 기호에 대한 객관적 지표가 될 수 있다(고려진, 2009).

시각 반응 시간 측정은 연령 선호에 민감하다(Abel et al., 1998; Harris, Rice, Quinsey & Chaplin, 1996; Quinsey, 1996).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아동 대상 성범죄자들이 성인 사진 자극보다 아동 사진 자극에서 시각 반응 시간이 더 길었다는 점을 나타낸다. 이러한 시사점은 시각 측정 방식이 아동 대상 성범죄자들의 아동에 대한 성적 기호를 판별해내는 정확률이 높다는 점을 뜻한다. Abel 등(1994)의 연구와 Harris 등(1996)의 연구에서는 남자 아동 대상 성범죄자와 일반 남성을, 그리고 Abel 등(1998)의 연구에서는 남자 아동 대상 성범죄자와 성인 대상 성범죄자를 시각 반응 시간 측정으로 구별해 낼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해내었다.

Abel Assessment for Sexual Interest(AASI, 2001)는 성적 기호에 대한 시각 반응 시간을 측정하도록 만들어졌다. 북미지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구로서 아동과 성인 자극을 모두 누드 사진이 아닌 일상적 의복을 착용한 사진 자극을 사용한다. 2~4세, 8~10세, 14~17세, 21세 이상 등 다양한 연령과 인종의 22개의 이질적인 범주의 성적 자극에 대하여 시각 반응 시간의 상대적인 비율을 측정하여 성적 선호를 평가한다(Abel, Jordan, Hand, Holland & Phipps, 2001). Abel 등(2001)의 연구에 의하면, AASI가 성범죄자들에서 아동에 대한 성적 기호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한다.

3)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

① Static-99(Hanson & Thornton, 2000)

Hanson과 Thornton(2000)에 의해 개발된 Static-99는 보험통계적(actuarial) 변인들을

사용한 10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남자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 재범 가능성을 평가하는 도구이다. Static-99의 장점은 성범죄 재범율과 관련되었다고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용하였다는 것과 다양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예언 정확성이 그리 높지 못 하며($ROC=.71$), 광범위한 위험성 평가에 포함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포함하지 못 할 수도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② Psychopathy Checklist-Revised(PCL-R; Hare, 1991)

사이코패스는 재범가능성 예측에 있어서 가장 예측력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Hare, Forth & Stachan, 1992). 처음 22문항이었던 PCL은 수정을 거쳐 20문항이 현재 사용되고 있다. PCL-R은 반구조화된 면담 기법을 사용하여 20개 항목을 평가해 사이코패스 여부를 판단한다. 각 항목에 대해 0~2점을 주도록 되어 있으며, 피검자들의 직접적인 보고에 의해서만 문항을 평가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즉 평가자는 피검자와의 면담에만 의존하지 말고 가능한 모든 객관적인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내릴 것을 권고한다. 예를 들어 생활기록부, 경찰기록, 소년전과, 수용시설에서의 생활태도, 분류심사 결과, 가족 및 친지들에 대한 방문 면담까지 포함하여 가능한 한 최대의 정보를 바탕으로 각 문항에 대해 평가를 내리도록 되어있다.

③ Sex Offender Need Assessment Rating(SONAR; Hanson & Harris, 2001)

위험성 평가에서 역동적 변화 요인의 중요성을 잘 반영한 SONAR는 5개의 안정적 변화 요인(친밀감 결핍, 부정적 사회 영향, 성폭력 태도, 성적 자기 통제, 일반적 자기 통제)과 4개의 민감한 변화요인(물질 남용, 부정적 기분, 분노, 희생자 접근)으로 구성되어 있다.

④ KSORAS(Korean Sex Offender Risk Assessment Scale; 이수정 등, 2008)

현재 전자감시 청구전 조사 시에 활용되는 한국판 성범죄자 재범예측도구로서 총 1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8년도와 2010년도에 이루어진 재범예측력 연구에서 이 도구는 13점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재범예측력이 최대가 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4. 외국의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

1) 약물치료

성범죄자 치료에 약물이 등장한 것은 1940년대 oestrogen이 사용되면서부터이다(Gordon & Grubin, 2004). 하지만 오심, 혈전증, 여성형 유방 등의 부작용이 심해 사용의 적합성에 관해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후 oestrogen의 문제점을 개선한 대체 약물들이 개발되었는데, cyproterone acetate(CPA)와 medroxyprogesterone acetate(MPA)가 그것이다. CPA와 MPA는 항안드로젠(antiandrogen) 약물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CPA는 유럽과 캐나다, MPA는 미국에서 주로 사용된다. 이러한 항안드로젠 약물은 테스토스테론 합성을 차단해 혈중 테스토스테론의 수치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성욕이 저하되고 정자 생성을 포함한 발기, 사정 등 성 관련 행위를 저해하는 역할을 한다(Bradford, 1985). 항안드로젠 약물의 이러한 작용은 PPG나 자기보고식 검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약물 복용 시 성적 각성 정도가 낮아지고 자위행위나 성적 판타지의 빈도도 줄어든다는 사실은 여러 번 보고된 적이 있다. 하지만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를 목적으로 항안드로젠을 투여할 경우에는 대부분 약물만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 바람직한 결과를 얻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따라서 개인 상담이나 집단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이다. 이는 투약을 중지하면 언제라도 약물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성범죄 억제력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심리치료와 병행하여 약물이 사용된다. 항안드로젠 약물을 심리치료와 함께 사용한 경우, 치료 집단의 재범율은 1%~18%인 것에 비해, 비치료 집단과 치료 탈락 집단의 재범율은 9%~68%인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는 성선자극호르몬유리호르몬(gonadotrophin-releasing hormone, GnRH)을 성범죄자 치료에 응용하게 되었는데,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항안드로젠 약물과 병행하여 사용되었다(Rousseau, Dupont & Labrie, 1988; Rosler & Witztum, 1998; Bradford, 1998). 그리고 long-acting gonadotrophin-releasing hormone agonist analogues는 외과적 거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저하시켜 일탈적 성적 기호나 성욕과다증(hypersexuality) 치료에 효과를 나타낸다고 알려진다(Bradford & Kaye, 1999). 성선자극호르몬유리호르몬 중 하나인 황제형성유리호르몬(luteinizing hormone-releasing hormone, LHRH)의 합성물인 luteinizing acetate는 고환에서 스테로이드 생성을 방해해 남성호르몬인

안드로겐의 생성을 방해한다. 따라서 일탈적 성적 판타지와 성적 욕구, 이상 성행동이 감소하게 된다고 한다(Rosler et al., 1998). 또한 부작용은 CPA나 MPA 보다 적고, CPA나 MPA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알려진다(Dickey, 1992).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s, SSRIs)가 성범죄자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도 존재한다. 일명 ‘행복 호르몬’으로 불리기도 하는 세로토닌은 뇌의 시상하부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의 하나로 기분조절, 수면, 음식섭취, 공격성, 통증에 영향을 미친다. 세로토닌의 저하는 공격성 증가 또는 불행감 등을 초래한다. 따라서 SSRI는 세로토닌이 presynaptic cell에 재흡수되어 사라지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게 하며 이런 기분 상승효과는 성범죄 재범에 억제요인이 된다고 알려진다.

〈표 4〉 항안드로젠 약물치료 후 성범죄 재범율

연구자 (연도)	참가자	치료	추적 기간	재범율
Kravitz 등 (1995)	29	MPA+인지행동치료(개인, 집단)	6개월	3%
Federoff 등 (1992)	46	MPA+집단치료 집단치료	5년	15% 68%
Meyer 등 (1992)	61	MPA+집단치료, 개인치료 집단치료, 개인치료 치료 중도 탈락 집단	2~12년	18% 58% 35%
Maletzky (1991)	200	MPA+인지행동치료(집단)+가족치료 인지행동치료(집단)+가족치료 치료 중도 탈락 집단	3년	1% 6% 9%
McConaghy (1988)	30	MPA+상상적 탈감각 요법 (imaginal desensitization) 상상적 탈감각 요법	1년	13% 20%
Berlin 등 (1981)	20	MPA MPA 투여하지 않음	1~13년	15% 65%
Gagne (1981)	46	MPA+환경 치료(milieu therapy)	1~3년	17%
Langevin (1979)	37	MPA+자기주장 훈련 자기주장 훈련	2년	15% 20%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는 성범죄자 치료에 유용성이 알려지기 전부터 우울, 불안, 강박장애의 치료에 흔히 사용되는 약물이었다.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가 성범죄자 치료에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이 약물이 강박장애의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성도착증(paraphilia)¹⁾은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성도착증을 강박 장애와 유사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Coleman, 1991).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를 성범죄자에게 투여하면 일탈적 성적 판타지와 성적 욕구가 감소하며, 투약이 용이하고 부작용이 적다. 또 특정 범죄인의 범행에 유발인자로 작용하는 불안이나 우울증 등을 함께 다룰 수 있다.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는 성적인 집착(sexual preoccupation), 범행의 강박적 측면, 우울증이나 불안과 관련된 범행, 충동적 범행에 가장 효과를 나타낸다. 최근에는 항안드로젠 약물 대신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가 성도착증의 약물 치료에 최우선 순위로 사용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약물들과 관련된 연구에는 그 원인이나 기제가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것이 많다. 그리고 연구와 관련된 방법론이나 과학성에 대한 논란도 존재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고려점은 약물치료가 모든 성범죄자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Davison, 2007). 바로 이와 같은 연유로 약물치료의 대상자 선정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 시 꼭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특정한 정신건강 문제가 평가나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정신 질환이 재범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정신 장애가 치료를 받는 데 악영향을 끼칠 경우)

② 다음 중 하나 이상 해당할 때 :

- 각성 수준이 높음(hyperarousal)
(예를 들어, 빈번한 성적 회상, 성적인 집착, 성적 각성 통제 어려움)
- 침입적 성적 판타지나 욕구(intrusive sexual fantasies or urges)
- 통제하기 힘든 성적 욕구에 대한 호소

1) 흔히 변태성욕으로 알려져 있는 성도착증은 성행위 대상이나 성행위 방식에서 비정상성을 나타내는 정신장애이다. 여기에는 노출증, 관음증, 물품음란증, 소아기호증, 마찰도착증, 성적 가학증, 성적 피학증 등이 포함된다.

- 성적 가학증이나 위험한 성도착증이 있을 때,
관음증이나 노출증 같은 도착행위가 반복해서 나타날 때

2) 인지행동치료(cognitive-behavioral therapy, CBT)

성범죄 치료 장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인지행동치료는 범죄자 처우에 대한 관심이 사회복귀(rehabilitation) 측면으로 기울던 1980년대에 성범죄자 치료 분야에 도입되었다. 인지행동치료는 재범 관련 위험 요인, 범죄자의 자기통제 능력 향상, 인지적 측면과 행동적 측면의 변화를 통한 재범 감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Hudson, 2005). 이러한 접근은 범죄자를 합리적인 인간(rational actor)으로 보고 생각이 감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강조한다. 인지행동치료의 목적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하고 재범으로 이어지는 고위험 상황을 피하는 방법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다.

① 재범 방지(relapse prevention)

원래 재범 방지 요법은 중독 치료에서 사용되던 치료기법을 성범죄자 치료에 적용한 것이다. 재범 방지 요법은 재범과 관련되는 혼란 행동적·정서적·인지적 요소가 있다고 가정한다. 자기 통제력이 아주 중요하며, 범죄자가 자신의 범 죄 촉발요인을 알게 되면 피할 수 있다고 예상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범 방지 요법에서 고위험 상황과 재범 촉발 요인을 인식해내는 작업은 중요하다. 이 치료에서는 범 죄로 이어지는 사고 패턴, 감정, 상황을 인식하도록 한다. 일단 자신만의 경향성과 범 죄 사이클(offense cycle)을 완전히 이해하고, 고위험 상황에서의 대처방법을 습득하도록 돕는다.

② 인지 재구조화(cognitive restructuring)

인지 재구조화는 성범죄자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발달시킨 왜곡된 신념을 새롭게 구조화시키는 것이다. 인지 왜곡(cognitive distortion)²⁾은 자신을 정당화시켜 죄책감

2) 인지왜곡의 예 : 아동도 성적인 관계를 같이 즐겼다. 어른과의 성적인 행위는 아동의 성교육에 도움이 된다. 아이가 나를 유혹했다.

이나 수치심에서 벗어나게 해 준다. 인지재구조화 작업은 왜곡되어 있는 인지적 신념을 직면하고 변화시킨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각의 범죄자가 어떤 종류의 인지 왜곡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치료자는 인지 왜곡에 도전하고 새로운 인지 공식을 제공한다.

③ 사회기술 훈련(social skills training)

성범죄자들에 부족한 사회적 상황에서 성공적인 상호관계를 이루어나갈 수 있는 기술의 습득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사회적 관계에 대한 비합리적인 두려움 제거, 역할 연기, 치료자 모방 등을 통해 사회적 상황에서 필요한 기술을 익히도록 한다. 자기주장 훈련은 스스로를 효율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④ 피해자 공감하기(victim empathy)

많은 수의 성범죄자들은 피해자가 자신으로 인해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거나 자신의 성행위를 즐겼다고 인지 왜곡을 함으로써 자신의 범죄를 부인한다. 피해자 공감에서는 자신의 범죄가 피해자에게 끼친 영향을 이해하도록 한다. 자신의 피해자 영상을 보거나 역할 연기, 실제 다른 성범죄의 피해자였던 사람의 강의를 듣게 하기도 한다.

⑤ 혐오치료(aversion therapy)

혐오치료는 일탈적 성적 판타지와 신체적 처벌을 조건화시키는 것이다. 치료자는 대상자에게 선호하는 일탈된 성행위에 대한 판타지를 떠올리고 이를 말로 표현하게 한다. 이 때 혐오 자극을 함께 주는 것이다. 혐오 자극으로는 악취같이 무해하지만 고통스러운 것을 사용한다. 또는 치료자가 일탈적 성적 판타지(에이딩과 관련된 일탈적 성적 판타지)에 대해 시각적인 묘사를 하여 대상자가 그것을 떠올릴 때 혐오 자극을 주는 방법도 있다. 적절한 영상 자극(예-성인과 관련된 성적 판타지)을 제시할 때는 혐오 자극을 주지 않는다.

수용시설에서 인지행동치료나 행동치료를 받은 경우 재범율이 3~31%로 나타났다. Marques 등(1994)은 Atascadero State Hospital에 수용된 아동 치한범과 강간범을 대상으로 자발적

으로 치료에 응하여 무선적으로 선택된 치료집단, 자발적으로 치료를 원했으나 선택되지 않은 집단, 비자발적 참가자의 3집단으로 나누었다. 이완 훈련, 성교육, 사회기술 훈련, 스트레스와 분노 조절 훈련, 재범 방지 요법을 포함한 인지치료를 실시하고 7년 후에 재범을 추적한 결과, 자발적 치료 집단의 경우 8.2%, 자발적으로 치료를 원했으나 치료를 받지 않은 비치료 집단 13.4%, 비자발적 치료 집단은 12.5%로 나타났다(Marques et al., 1994). 아동 치한범과 강간범을 상대로 수용기간 동안 인지행동치료를 실시하고 가석방 기간 동안 재범 방지 요법을 실시한 두 연구에서는 6년 후 아동 치한범의 재범율은 3%, 강간범의 재범율은 20%로 나타났다(Hildebran et al., 1992). 그리고 7년 후 재범율은 치료 집단의 경우 6%, 비치료 집단의 경우 33%로 나타났다(Pithers et al., 1989). 하지만 치료 집단과 비치료 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연구들도 존재하는 데, 두 연구 다 심리치료 없이 행동치료만 시행하였고, 한 연구에서는 대상자가 고위험군인 가족 외 아동치한범이었다(표 4 참고).

그리고 출소 후 심리/행동치료를 지속적으로 실시한 경우, 치료집단의 재범율은 6~39%였고 모든 치료집단이 비치료 집단에 비해 재범율이 낮았다. 아동치한범과 노출증인 대상자 4381명을 대상으로 인지행동치료(혐오 치료, 긍정적 조건과, 바이오피드백, 자위 재조건화, 공감 훈련, 재범방지 요법)을 실시한 결과 이성 소아기호증자의 재범율은 6%였고, 동성 소아기호증자의 재범율은 15.1%였다(Maletzky, 1993). 노출증자들을 대상으로 혐오치료(전기 쇼크, 악취를 혐오자극으로 사용), 오르가즘 재조건화와 혐오치료(orgasmic reconditioning and aversion), 자위습관화(masturbatory satiation) 치료를 하고 8년 뒤 재범을 추적한 결과, 치료 집단의 재범율은 39.1%, 비치료 집단의 재범율은 57.1%로 나타났다(Marshall et al., 1991). 가족 외 아동 치한범에게 사회 기능, 스트레스 조절, 피해자 공감, 재범 방지 등에 초점을 맞춘 인지행동치료를 실시하고 1년 후 재범을 추적해보니, 치료집단의 재범율은 12.2%였고 치료 중도 탈락 집단의 재범율은 34.9%였다. 또 아동치한범을 대상으로 사회 기술 훈련과 혐오치료, 자위 재조건화(masturbatory reconditioning) 치료를 시행한 후의 재범율은 치료집단은 13.2%, 비치료 집단은 34.5%였다(Grossman et al., 1999).

인지행동치료 기법을 사용한 18개의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통찰 치료나 상담, 행동치료를 단독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재범 감소에 효과를 나타내지 못 했다. 하지만 수용시설에서 인지행동치료를 실시하고 8년 후 재범율을 추적한 결과 14.9%의 재범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수용시설 보다 상대적으로 저위험군인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인지행동치료를 실시한 결과, 재범율이 31.24% 감소하였다(Washington Stat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2006).

〈표 5〉 수용시설에서 심리/행동 치료 시 성범죄 재범율

연구자 (연도)	대상자 수	추적기간 (년)	치료	대상자 유형	재범율(%)
Marques (1994)	299	7	인지행동치료	아동치한범+강간범 자발적 참가자 자발적이었으나 치료비참가자 비자발적 참가자	8.2 13.4 12.5
Hanson (1993)	197	19~28	행동치료	아동치한범 비치료 집단	44 38
Hildebran (1992)	167	6	인지행동치료(수용시설) 재범 방지 요법(가석방)	아동치한범 강간범	3 20
Pithers (1987)	90	7	인지행동치료(수용시설) 재범 방지 요법(가석방)	아동치한범+강간범 비치료 집단	6 33
Rice 등 (1991)	136	6.3	혐오치료	가족외 아동치한범 (정신질환자 41명)	31(성범죄) 43(폭력범죄) 치료집단과 비치료집단 재범율동일
Gordon (1989)	130	2~7	인지행동치료	아동 치한범 +강간범	10

5. 외국 교정심리치료제도 고찰

1) 뉴질랜드 교정시설 내 심리치료

뉴질랜드의 첫 번째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으로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 1989년부터 시작되었다. 인지행동치료를 기본으로 자신의 사고와 행동이 서로 영향을 미친 결과 범죄 행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을 가르침으로써 재범을 방지한다. 치료를 통해 이러한 순환의 고리

를 끊고 바람직한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기술과 전략을 습득하도록 돕는다.

16세 미만 아동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원자에 한해 실시된다. 거의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예정된 형량이 끝나 갈 때쯤 Kia Marama로 이송되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참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지적 장애(IQ 70이하)나 정신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참여가 제한된다.

2주에 걸쳐 임상적 면담과 심리검사를 실시하는데, 평가 시작 전에 자신의 사회적, 성적, 정서적 경험들에 대해 기술하게 한다. 치료자는 대체로 구조화된 면담(structured interview) 기법을 사용하는데, 임상적 면담은 자신의 범죄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과 범죄 동기, 사회적 유능감을 탐색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여기에 생활관리 기술, 효과적인 여가 사용, 대인관계의 목적과 친밀한 대인관계 형성에 필요한 능력, 자신에 대한 생각과 태도, 감정 중에서도 특히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 피해자에 대한 인식과 공감 능력, 자신의 범죄 축소 정도와 책임의식, 성에 대한 태도, 포르노와 마약의 사용여부가 추가된다. 그리고 성에 대한 태도, 신념, 행동(아동/성인과의 성행위 포함)에 대한 설문지, 다양한 성행위에 대한 태도와 판타지, 여성에 대한 공격적 태도와 폭력 허용 정도, 정서적 기능(특히 분노, 화, 우울), 대인관계 능력(특히 자존감, 친밀함, 외로움), 성격 등에 대한 16개의 자기 보고식 설문지가 주어진다. 그리고 치료가 끝난 후에 다시 한 번 평가를 실시한다.

인지행동 치료를 기본으로 하는 교육적 프로그램으로 집단치료 방식으로 운영된다. 2주에 걸쳐 임상적 면담과 심리검사를 실시하는데, 평가 시작 전에 자신의 사회적, 성적, 정서적 경험들에 대해 기술하게 한다. 구조화된 면담(structured interview) 기법을 사용하고, 자신의 범죄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과 범죄 동기, 사회적 유능감을 탐색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여기에 생활관리 기술, 효과적인 여가 사용, 대인관계의 목적과 친밀한 대인관계 형성에 필요한 능력, 자신에 대한 생각과 태도, 감정 중에서도 특히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 피해자에 대한 인식과 공감 능력, 자신의 범죄 축소 정도와 책임의식, 성에 대한 태도, 포르노와 마약의 사용여부가 추가된다. 그리고 성에 대한 태도, 신념, 행동(아동/성인과의 성행위 포함)에 대한 설문지, 다양한 성행위에 대한 태도와 판타지, 여성에 대한 공격적 태도와 폭력 허용 정도, 정서적 기능(특히 분노, 화, 우울), 대인관계 능력(특히 자존감, 친밀함, 외로움), 성격 등에 대한 16개의 자기 보고식 설문지가 주어진다. 그리고 치료가 끝난 후

에 다시 한 번 평가를 실시한다.

규범 확립(norm building), 범죄 유발 요인을 이해하고 인지왜곡의 탐색을 위한 범죄행위 이해(understanding your offending), 충동 재조건화(arousal reconditioning), 피해자 공감(victim impact & empathy), 감정 조절(mood management), 대인관계 기술(relationship skills) 습득, 재범 방지(relapse prevention)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범죄자들의 재범율이 15~20%인 것에 비해 참여자들의 재범율은 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Hudson, Wales & Ward, 1998). 또 다른 연구에서는 비치료 집단의 재범율이 21~22%인 것에 비해 참여자들의 재범율은 8~10%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프로그램 참가자 중 재범을 저지른 사람의 경우, IQ가 낮았고 피해자가 남성 혹은 양성인 경우가 많았다. 성인이 되기 이전 범죄를 시작했거나 성장기에 부모나 양육자의 죽음을 경험한 경우가 비재범 집단에 비해 각각 2배와 3배가 많았다(Bakker, Hudson, Wales & Riley, 2003).

2) 영국 교정시설 내 심리치료

재범 감소와 잠재적 피해자의 발생을 막기 위해 고안되어 성범죄나 성적 요소가 있는 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치료 프로그램으로서 England와 Wales의 27개 교도소에서 실시되고 있다.

1997년의 경우, 참가한 성범죄자수가 560여명에 달하는 데, 이는 영국의 경우 2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성범죄자가 연간 1400여명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1/3이상의 성범죄자들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셈이다(박상진 & 신준섭, 2005). 2000년에는 연간 1000명이 넘는 성범죄자가 치료를 받았다.

치료에 들어가기 전 모든 대상자는 평가를 거치는데, 이는 치료의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고, 치료욕구를 파악해 적절한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해서다. 평가는 면담과, 심리검사, 건강 상태 측정, 일탈적 성적 기호에 대한 심라생리 검사(음경 반응 측정, penile plethysmography)가 포함된다. 치료가 끝난 후, 평가는 반복하여 실시된다. 인지행동치료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주당 2~5회 실시된다.

SOTP의 효과성은 방법론상의 제약으로 인해 아직까지 확실히 검증되지 않고 있다. 1994년에 실시한 기초평가결과를 보면, 인지 왜곡 수정에서 비교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진다. 그 중에서도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는 범죄자들의 경우에 특히 그러했다. 하지만 공감이나 재범 방지 측면에서는 효과가 미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2002년 Friendship, Mann, Beech는 4년 이상 수용생활을 했던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출소 2년 후 재범률을 추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SOTP를 받은 집단(647명)과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비교 집단(1910명)의 재범율을 조사한 결과, 치료 집단이 비교 집단에 비해서 재범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만, 두 집단 간의 차이가 미미(0.2%)하여 치료효과라고 보기는 힘들었다. 연구자들은 이런 모호한 결과가 짧은 추적 기간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Friendship, Mann & Beech, 2002).

〈표 6〉 SOTP 치료 프로그램

유 형	내 용	대상자	회기	기간(월)
core 프로그램	범죄 정당화 사고 수정 피해자 공감 재범 방지와 성공적인 삶을 위한 기술 습득	구분 없음	90	6~8
adapted 프로그램	성에 관한 지식 습득 범죄 정당화 사고 수정 재범 방지와 성공적인 삶을 위한 기술 습득	언어/읽기 문제로 core프로그램에 부적합한 경우	85	6~8
extended 프로그램	범죄/자신과 관련된 특정 사고 수정 범죄 관련 감정 조절 능력 습득 친밀한 대인관계를 위한 기술 범죄와 관련되는 성적 각성이나 판타지에 대한 이해(개인 치료) 재범 위험 요소 인식	core/rolling 프로그램을 끝냈으나,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	74	6
rolling 프로그램	core 프로그램과 유사하지만, 프로그램 중 참가/탈퇴 가능	저위험군, core 프로그램을 끝낸 고위험군		3~4
booster 프로그램	core, rolling 프로그램 내용 수정 출소 후의 생활 준비 장기 수용자	core, extended, rolling 프로그램을 끝낸 대상자, 18개월 내 출소 예정자	35	2~3

3) 독일 교정시설 내 심리치료

독일에서 시행하는 치료프로그램의 주목적은 재범을 줄이고 범죄자가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이다. 프로그램 입소 전에 성폭력 위험성(Sexual Violence Risk, SVR-20), 재범위험성 등을 평가한다.

Rheinland-Pfalz주에서는 영국의 SOTP(Sexual Offender Treatment Program)를 기본으로 한 BPS(Behandlungs Program fur Sexualstraftater)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대화태도, 자기인지와 타인인지, 스트레스 조절, 도덕적 행동과 감정이입, 중독 치료 등의 범죄 비특성화 부분과 개인적인 생활사, 성범죄 단계, 위험상황, 범죄의 경과, 피해자 감정이입, 재범예방 등과 같은 범죄특성화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Bayern주에서는 여러 교도소에 성폭력 범죄자 치료 시설을 설치하고, 수용자에 따라 인지 행동치료, 정신역동치료, 사회교육적 치료방식을 조합한 다양한 사회치료내용을 적용하고 있다. 비폭력 훈련, 사회능력 훈련, 알콜과 재범 예방, 성적 치료, 재범 방지 훈련, 출소 후의 삶 준비 등이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다. 보통 18~30개월이 소요되며 개인치료나 집단 치료를 실시한다.

Baden-Wurtemberg주에서는 주요 교도소에 정신치료를 위한 전문가를 고용하여 개인치료와 BPS 프로그램, 범죄에 초점을 맞춘 행동치료, 환경치료 등을 시행하고 있다(법무부, 2009).

4) 호주 교정시설 내 심리치료

호주의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은 주로 외국의 치료 프로그램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인지 행동치료가 다수이며, 범죄발생 요소를 제거하는 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

New South Wales의 교정시설에서는 중등도 위험군 성범죄자에게는 CUBIT(Custody Based Intensive Treatment) 프로그램을, 저위험군에게는 CORE(CUBIT Outreach)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성범죄를 저지른 성인과 청소년이 그 대상이다. CUBIT과 CORE 프로그램의 목적은 공감 결여, 인지 왜곡, 자기 통제력 부족 등의 범죄위험 요소를 교정해 재범을 줄이는 데 있다.

Victoria에서는 SOP(Sex Offender Programs)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CUBIT과 유사하지만 성범죄자의 특별한 욕구를 위한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다. 성범죄를 저지른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치료집단(330명)과 중도 탈락 집단의 4·5년 후 재범률을 조사한 결과, 각각 4%와 20%로 나타났다.

Western Australia에서는 성범죄를 저지른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SOTU(Sex Offender Treatment Unit)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1987년부터 1999년까지 SOTU를 거쳐 간 2165명의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재범률을 조사한 결과, 치료를 받지 않은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 이에 대해서 Lievore는 두 집단 간 위험성 정도, 원주민 포함 유무, 형량 등의 차이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Livore, 2004).

1996년에는 성범죄 재범 감소를 목적으로 SOTP(Sexual Offender Treatment Program)를 개발하여, 교정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다. SOTP는 인지행동치료와 재범 방지 원칙에 근거해 자기 진도에 맞춰 조정이 가능하게 설계되었다. 스스로 지원한 성범죄자들만이 치료에 참가할 수 있다. SOTP는 평가와 치료 단계(15주), 치료 계획 단계(5주), 집단 치료로 이루어지는 집중 치료 단계(25주)로 구성되어 있다. 집중 치료 단계의 세부 내용은 <표 7>과 같다.

<표 7> 집중 치료 단계의 내용

	내 용	치료 기법
효과적 대인관계 모듈	부적절한 대화 습관 교정 바람직한 대처 기술 습득 역할연기	
인지왜곡 모듈	인지왜곡 교정	학습 이론
일탈적 성적 기호 통제 모듈	일탈적 성적 기호의 통제	구체적인 인지행동 개입
사회적 이슈 모듈	일탈적 성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 요인 탐색 친사회적 행동 학습	
피해자 모듈 (선택적 사용)	피해자 이해	실제 성범죄 피해자 대면
최종 모듈	재범 방지 자신의 특정한 범죄 사이클과 고위험 상황에 대한 자각 위험 상황에서의 효과적 대처 전략 습득	

출소 1년 후 재범을 추적한 결과, 치료집단과 비치료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Schweitzer & Dwyer, 2003). Schweitzer 등은 추적 기간이 1년으로 짧았던 점과 데이터의 유실, 프로그램의 정확성 등이 결과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첫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정의와 특성, 유형, 둘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적 개입의 필요성, 셋째, 치료 대상자 선별 및 예후를 위한 평가 방법, 넷째, 구체적인 치료방안인 약물치료와 인지행동치료의 내용, 마지막으로 외국의 사법제도 내에서 교정심리치료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요약하자면 외국의 교정시설에서는 성범죄자들에게 매우 지속적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성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약물을 보조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약물치료 시 대상자에 대한 약물의 적합성 판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PPG 등 생물학적 평가까지를 허용하고 있었다. 법무부 뿐 아니라 관련 학회 및 전문가집단이 이와 같은 사항들에 대해 보다 치밀하게 준비를 하지 못한다면 단순한 약물투약이 지니는 범죄예방효과는 기대보다 훨씬 무효할 가능성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서는 관계기관과 실무전문가들이 보다 심도있고 성실하게 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참고 문헌〉

경찰청 홈페이지(2009). 5대 범죄 발생, 검거 현황

http://www.police.go.kr/infodata/pds_07_totalpds_03_09.jsp

고려진, 이수정 (2008). 아동 대상 성범죄자, 친족 성범죄자 그리고 강간범 간의 특성 비교: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범죄 관련 변인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일반, 27, 1-36.

박상진, 신준섭 (2005). 외국의 성폭력 가해자 치료프로그램 연구. 한국형사정책학회, 17, 313-336.

법무부 (2009).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자를 위한 성범죄자 상담치료 프로그램 매뉴얼.

세계일보 (2008). <http://www.segye.com/news>

이수정, 고려진, 박혜란 (2008).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도구 개발 및 타당도 연구. 형사정책연구, 19, 309-345.

중앙썬데이 뉴스 (2009). <http://sunday.joins.com/article/view.asp>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아동 안전지표체계 구축 및 개발'

Alexander, M. A. (1999). Sexual offender treatment efficacy revisited. *Sexual Abuse: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11, 101-117.

APA(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1995).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 제4판 (DSM-IV). 이근후 외 14명(역). 서울. 하나의학사(1994).

ATSA(Association for the Treatment of Sexual Abusers). (2000). The effectiveness of treatment for sexual offender. <http://www.asta.com>

Barbaree, H. E. & Marshall, W. L. (1998). Deviant sexual arousal, offense history and demographic variable as predictors of reoffense among child molesters. *Behavioral Sciences and the Law*, 6, 267-280.

Bartol, C. R. & Bartol, A. M. (2008). *Criminal behavior: A psychosocial approach(8th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Prentice-Hall.

Blumenthal, S., Gudjonsson, G. H., & Burns, J. (1999). Cognitive distortions and blame attribution in sex offenders against adults and children. *Child Abuse & Neglect*, 23, 129-143.

- Bogaerts, S., Delclerca, F., Vaheule, S. & Palmans, V. (2005). Interpersonal factors and personality disorders as discriminators between inter-familial and extra-familial child molester.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49, 48-62.
- Craig, L. & Hutchinson, R. B. (2005). Sexual offenders with learning disabilities: Risk, recidivism and treatment. *Journal of Sexual Aggression*, 11, 289-304.
- Doren, D. M. (1998). Recidivism base rates, predictors of sex offender recidivism, and the sexual predator commitment laws. *Behavioral Sciences and the Law*, 16, 97-114.
- Erickson, D. W. (1988). Behavior patterns of child molesters, *Archives of Sexual Behavior*, 17, 77-86.
- Freeman-Longo, R. E. (1996). Prevention or problem? *Sexual abuse: A Journal of Research & Treatment*, 8, 91-100.
- Firestone, P., Bradford, J. M., McCoy, M., Greenberg, D. M., Larose, M. R. & Curry, S. (1999). Prediction of recidivism in incest offender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4, 511-531.
- Friendship, C. & Beech, A. (2005). Reconviction of sexual offenders in England and Wales: An overview of research. *Journal of Sexual Aggression*, 11, 209-223.
- Friendship, C., Mann, R., & Beech, A. (2003). Evaluation of a national prison-based treatment program for sexual offenders in England and Wal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8, 744-759.
- Gibbens, E. C., Soothill, K. L. & Way, C. K. (1978). Sibling and parent-child incest offenders.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18, 40-52.
- Groth, A. N. & Birnbaum, H. J. (1978). Adult sexual orientation and attraction to underage persons. *Archives of Sexual Behavior*, 7, 175-181.
- Groth, A. N., Longo, R. E. & McFadin, J. B. (1982). Undetected recidivism among rapist and child molesters. *Crime & Delinquency*, 28, 450-458.
- Grunfeld, B. & Noreik, K. (1986). Recidivism among sex offenders: A follow-up study of 541 Norwegian sex offenders.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Psychiatry*, 9, 95-102.

- Gudjonsson, G. H. & Sigurdsson, J. F. (2000). Difference and similarities and between violent. *Child Abuse & Neglect*, 24, 363-372.
- Hall, G. N. (1995). Sexual offender recidivism revisited: A meta-analysis of recent treatment studi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3, 802-809.
- Hall, R. C. W. & Hall, R. C. W. (2007). A profile of pedophilia: Definition, characteristics of offender, recidivism, treatment outcomes, and forensic issues. *Mayo Clinic Proceeding*, 82, 457-471.
- HM prison service. (2002). The Treatment and Risk Management of Sexual Offenders in Custody and in the Community.
- Hanson, R. K. (2002). Recidivism and age: Follow-up data from 4,673 sexual offender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7, 1046-1062.
- Hanson, R. K. & Bussiere, M. (1998). Predicting relapse: A meta-analysis of sexual offender recidivism studi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6, 348-362.
- Holland, L. A., Zolondek, S. C., Abel, G. G., Jordan, A. D. & Becker, J. V. (2000). Psychometric Analysis of The Sexual Interest Cardsort Questionnaire. Sexual Abuse;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12, 107-122.
- Kilpatrick, D. G., Edmunds, C. N. & Seymour, A. (1992). Rape in America: A report to the nation. Washington, D.C.: National Center for Victims of Crime and Crime Victims Research and Treatment Center.
- Langevin, R., Curnoe, S., Fedoroff, P., Benett, R., Langevin, M. & Peever, C. (2004). Lifetime sex offender recidivism: A 25-year follow up study. *Canadian Journal of Criminology & Criminal Justice*, 46, 531-552.
- Levenson, J. S. & Morin, J. W. (2006). Risk assessment in child sexual abuse cases. *Child Welfare*, 85, 59-82.
- Lösel & Schmucker, M. (2005). The effectiveness of treatment for sexual offenders: A comprehensive meta-analysis, *Journal of Experimental Criminology*, 1, 117-146.
- Marshall, W. L. & Barbaree, H. E. (1990). Outcomes of comprehensive cognitive behavioral treatment program. Handbook of sexual assault: Issues, theories and treatment of the offender. New York: Plenum, 363-385.

- Nicholaichuk, T., Gordon, A., Gu, D., & Wong, S. (2000). Outcome of an institutional sexual offender treatment program: A comparison between treated and matched untreated offenders. *Sexual Abuse: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12, 139-153.
- Prency, R., Knight, R. & Lee, A. (1997).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recidivism among extra-familial child molester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5, 141-149.
- Robertiello, G. & Terry, K. J. (2007). Can We Profile Sex Offenders? A review of sex offender typologies. *Aggression & Violent Behavior*, 12, 508-518.
- Soothill, K., Herman, J., Francis, B. & Kirby, S. (2005). Identifying future repeat danger from sexual offenders against children: A focus on those convicted and those strongly suspected of such crime. *The Journal of Forensic Psychiatry and Psychology*, 16, 225-247.

Recent Stream of Crime Control Policies Against Sex Offences and Applicability of Psychology

Young-Jum Lee · Bok-Hee Kim · Soo Jung Lee³⁾
Kyonggi University

This study reviewed recent judicial policies against sex offences which might threat the most seriously safety of women. At the same time, psychological services of foreign countries were introduced to operate these policies successfully. Among psychological services, various risk assessment procedures were applied by use of psychological evaluation and psychological therapies were broadly applied for correcting offenders' behavioral problems. Finally this paper suggested that these psychological services should be inserted into Korean judicial system to succeed recently adopted crime control acts.

Keywords : Sexual offences against children, Pedophile, PPG, Abel test,
Recidivism rate of sex crime,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3) 교신저자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산 94-6 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교수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2009년도 기초인문사회(단독)B00979의 지원금으로 수행되었음.



한국성폭력상담소 가해자 상담사례 분석

양현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자원활동가)

○ 사례를 통해 함께 생각해볼 문제들

- 교육의 방향성을 선택할 때 따라오는 고민들

- 성인지적 관점을 갖는 것 :

관점 없이 지식만을 습득하는 경우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누구를 롤 모델로 삼을 것인가?

- 본인의 행동에 대한 재해석 :

재해석에 대한 동기부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성폭력에 대한 가해자 스스로의 편견을 어떻게 다루나?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무엇을 다룰 것인가?

- 관계맺기에 대한 성찰 :

기존의 심리적 문제들을 어디까지 다룰 것인가?

관계맺기방식에 대한 성찰의 필요성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 피해자에 대한 공감 :

피해자의 상태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전달할 것인가?

피해자의 상처가 큼을 강조하는 설명방식은 어떤 효과를 지니는가?

- 사건의 재발을 예방 :

성폭력을 조장하는 문화에 저항하는 힘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예방을 위해 가해자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 교육 목표의 설정

교육을 의뢰한 기관 또는 공동체와 피해자의 기대는 무엇인가?

이 기대가 교육 진행자의 목표 또는 피교육자의 기대와 일치하는가?

달랐다면 어떻게 조정되었는가?

- 사건 발생 후 교육에 참여하기까지의 과정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

가해자에게 이 교육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가해자는 주변인들에게 어떤 비판, 지지, 또는 비난을 받았나?

가해자와 상담자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었나?

※ 상담사례는 별지로 공유한 뒤 회수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성폭력가해자 상담 프로그램 진행 실습

이은심 (중앙대학교 성평등상담소)

■ 성폭력가해자에 대한 맥락적 이해

○ 내가 생각하는 성폭력가해자의 모습은?

조두순, 김수철, 김길태
 성범죄자, 강도, 살인자,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사이코패스, 정신병자, 환자, 성도착증
 변태, 바바리맨, 성기노출증
 파렴치범, 지하철 성추행범, 해수욕장 성추행범
 소아기호증, 로리타 콤플렉스, 유괴납치
 성희롱, 화식, 직장상사, 음담패설
 군대, 비누 줍기, 해병대 성폭력
 음란전화, 여성 속옷 절도범, 관음증

- : 가해자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떠올리는 가해자의 이미지는?
- : 이들 모두는 다 성폭력가해자이기 때문에 가해자교육을 할 수 있을까?
- : 만약 가해자교육을 한다면 이들 모두에게 똑같은 교육을 해야 할까?
- : 그렇다면 나는 가해자교육을 통해서 가해자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 성폭력가해자에 대한 이중적 태도

1) 익명의 성폭력가해자

-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다
- 사형, 화학적 거세 등 극단적 대책 요구

2) 주위의 가까운 가해자

- 아까운 인생 망쳤다
- 개인 사정 공감, 한없이 관대한 태도

- : 성폭력가해자는 내 주변에는 없다고 생각하며, 성폭력가해자는 특정 사이코패스나 정신병자라고 생각함. 그러나 ‘성폭력’의 피해유형이 매우 다양한 것과 마찬가지로, 성폭력가해자의 범주 또한 매우 넓음. 성폭력가해자를 ‘잔인한 흉악범’으로 한정하는 생각은 일부 가해자만 강력처벌하고, 나머지 가해자에 대해서는 사소하게 취급하며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함.
- : 성폭력의 가해행위는 똑같은 법적 처벌, 사회적 책임, 피해자의 고통을 유발하지 않으며 분명 각각의 행위는 다른 피해를 발생함. 그러나 성폭력 가해의 법적 처벌의 경중을 따지기에 앞서, 모든 가해행위는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를 유발한다는 것을 잊지말 것. 성폭력을 이렇게 다양한 연속선 상에서, 사회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인식할 때 성폭력에 대한 통합적인 인식이 가능함.

○ 성폭력가해자에 대한 공동체의 책임

- 성폭력가해자는 ‘짐승의 탈을 쓴 아주 분명한 흉악범’이라고 생각함.
- : 만약 내 생각처럼 성폭력가해자를 쉽게 찾을 수 없다면?
- : 아동지킴이, 학교 수위, 교사가 가해자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 : 누구를 감시하며, 누구에게 아이를 보호할 임무를 맡길 것인가?
- : 과연 누가 가해자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CCTV 설치한다고 해서 가해자를 찾을 수 있을까?

- 성폭력가해자는 짐승 같은 놈들이기 때문에 모조리 사형시켜 버려야 함.
- : 1-2명의 흉악범만 일벌백계한다고 성폭력이 없어질까?
- : 내 주위의 많은 소위 ‘가벼운 가해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 : 흉악범이 과연 짐승이라면, 우리는 ‘인간’이 아닌 ‘짐승’에게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 성폭력가해자에게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기
- : 이는 성폭력가해자에게 ‘짐승’이라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책임을 묻는 것
- : 성폭력가해자가 정당한 ‘죄값 치루기’는 것과 영원한 ‘사회적 낙인을 찍는 것’을 구분하기

- ‘짐승’, ‘괴물’과 같은 성폭력가해자를 만들어내는 사회 시스템을 성찰하기
 - : 공동체 일원으로서 성폭력에 대한 시민적 책임
 - : 성폭력 통념을 변화시키기 위한 사회적 책임
 - :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보장하는 국가적 책임
-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 :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은 개인적 차원의 자유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함
 - : 성적자기결정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이를 확장된 사회적 안전권의 문제로 제기해야 함
 - : 가로등, CCTV같은 장비의 문제 아니라 폭력과 침해, 안전에 대한 철학적 논의 필요

■ 성폭력가해자와 상담자의 관계 점검

성폭력 가해자와 나	상담 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	
성정체성	
학력	
지역	
나이	
경제적 상황	
국적	
외모	
장애	

○ 성폭력가해자에게 공감하기 / 직면하기

- 성폭력 가해자는 초기에 상담자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속이야기를 털어놓지 않거나, 심지어는 상담자가 자신에게 적대적이라고 여기고 방어적이거나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음. 그러나 이런 긴장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면 가해자에 대한 상담이나 교육이 불가능함
- 상담자는 초기에 가해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경청하고 가해자에게 공감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상호간의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가해자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것은 가해자의 잘못된 행동이나 인식에 대해서도 그대로 수용한다는 의미는 아님. 가해자가 스스로를 대해서 정당화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한다고 해도, 초기에는 이를 즉각적으로 비판하기 보다는 가해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경청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대한다는 의미임.
- 보호관찰소/교도소에서 만나게 되는 가해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중한 성폭력 범죄 경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범죄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이들의 경우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사회·경제적 자원이 취약하거나,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우가 많음. 범죄심리학에서는 이 부류는 자아존중감이 매우 낮은 그룹이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며, 상담자가 '강하게 공감하기'를 요청함.
-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가해자나, 학교 내 성희롱을 한 가해자의 경우 본인 스스로도 범죄라는 인식이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주위에서도 가해자를 두둔하는 여론이 높은 편임. 또한 이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학벌과 많은 사회·경제적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자아존중감도 높은 편임. 따라서 이런 부류의 가해자를 대상으로 '강하게 공감하기'를 해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범죄심리학에서 말하는 '공감하기'의 내용을 보다 맥락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 피해자 상담의 경우 피해자에게 공감해주는 과정만으로도 충분히 상담이 진행될 수 있음. 그러나 가해자상담의 경우 공감해주는 과정과 동시에 가해자의 잘못된 행위에 직면하는 과정을 필요로 함. 가해자는 끊임없이 자기방어를 하고 있지만 그 아래에 있는 내면의

갈등이나 자기반성의 목소리를 끌어내는 것이 필요함. 결정적 순간에는 가해자에게 스스로의 잘못을 직면하게 하는 단호함도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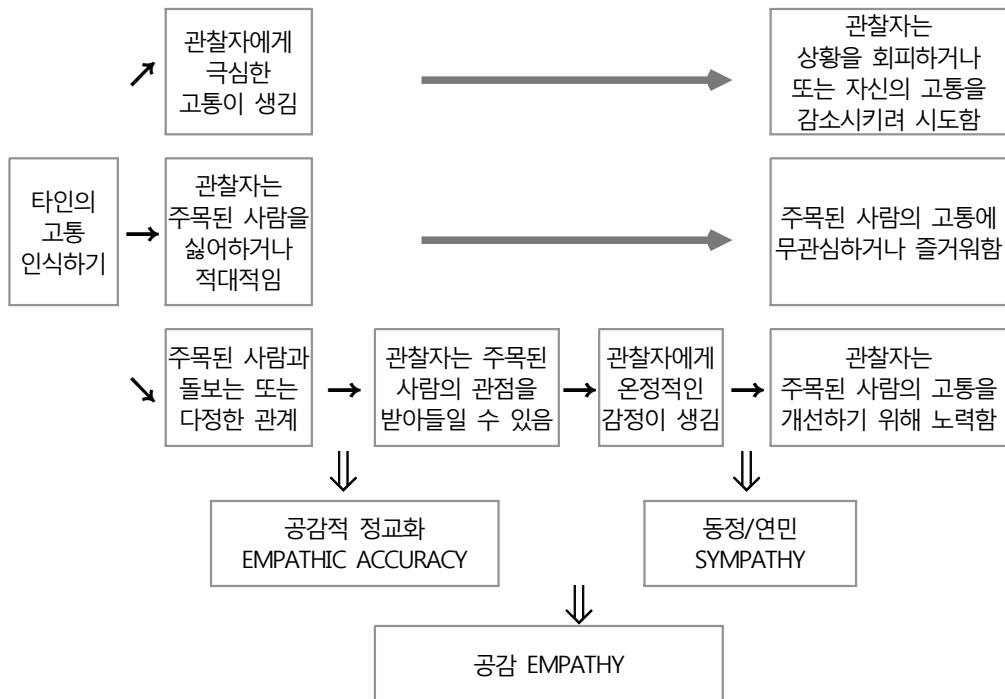
-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에게 가장 많은 고통을 남기지만, 대부분의 가해자들도 이 과정에서 고통을 받기 마련임. 이 고통이 가해자의 자기반성이 아니라 장래에 대한 불안함, 자기연민, 책임회피로 기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가해자 개인에게는 분명히 고통스러운 과정임. 가해자는 상담자와의 충분한 신뢰관계가 형성되면, 자신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자신을 오히려 ‘피해자의 위치’로 치환하려고 함.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노골적인 유형도 있지만, 피해자에게 충분히 미안하고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만 자신도 힘들고 고통받았다는 온건한 전략을 사용할 때도 있음. 가해자의 피해의식을 다룰 때, 상담자는 가해자에게 끊임없이 피해자의 존재를 상기시켜서 가해자에게 자신의 위치를 상대화해서 성찰할 것을 요청해야 함. 또한 가해자를 일방적으로 호통치거나 꾸짖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지만, 상담자는 공감하기/직면하기의 경계를 적절하게 인식해야 함.
- 가해자교육이 1:1 개인상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가해자에 대한 공감하기/직면하기는 주로 상담자에 의해서 이루어짐. 그러나 가해자교육이 집단상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가해자에 대한 공감하기/직면하기는 집단구성원들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며, 상담자를 이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며 진행하는 역할을 맡음. 집단상담의 경우에 집단구성원 서로 간의 영향력이 매우 커지기 때문에, 집단적인 역동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집단상담에서 상담자는 1:1 개인상담보다 훨씬 더 많은 도전을 받거나 부담감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집단상담 이전에는 충분한 숙련이 필요함. 이때 상담자 또한 1명의 상담자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2-3명의 보조상담자와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음. 집단상담의 경우 상담자는 사전에 집단구성원을 적절하게 선정하는 것에서부터, 프로그램 진행 도중에 부적절한 구성원을 집단에서 제외시키기, 집단상담 중간에 충분히 개인상담을 진행하기 등의 준비가 필요함.

▣ 성폭력가해자 교육의 목표 점검

- 성폭력가해자 교육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목표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설정. 8회기 16시간을 통해서 가해자가 몇십 년 동안 살아온 세계관, 가치관, 성 인식, 성폭력에 대한 통념을 모두 다 변화시킬 수는 없음. 따라서 교육시간 동안 주요하게 다룰 문제를 대해서 상담자가 목표 설정을 하는 것이 필요함
- 가해자가 가지고 있는 성 인식, 성폭력에 대한 통념, 여성주의적 지식, 교육에 대한 의지 및 참여도, 가해자와 상담자의 신뢰관계 등에 의해서 교육의 목표는 달라질 수 있음. 피해자에게 했던 구체적 가해행위에 대한 반성만을 요구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성폭력에 대한 통념을 변화시키거나 성폭력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성매매 등 여성폭력 전반에 대한 인식 전환을 목표로 할 수도 있음. 그러나 처음부터 너무 높은 목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가해자가 기존 여성주의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여성주의적 활동에 대해서 많이 참여했다고 해서 자신의 피해자에 대해서 우호적이라고 가정할 수 없음. 가해자는 통상적으로 성폭력 가해행위가 문제적인 행동이라고 동의하더라도, 자신의 가해행위는 다른 가해행위와 구분하며 정당화하려는 경향을 보임. 따라서 여성주의적 인식이 높다고 하더라도 추상적인 수준에서 성폭력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과 해당 사건에서 자신의 가해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구분되어야 함.
- 성폭력가해자 교육에서 어떻게 다른 단계의 목표를 설정하든지간에, 최소한의 목표는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를 공감하여 자신의 가해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임. 종종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진술은 다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동일한 상황을 각자의 처지에 따라 다르게 인식하는 것은 성폭력 사건뿐 아니라 일상적인 경험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 그대로 100%를 인정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음. 그러나 적어도 가해자가 주요한 가해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것은 필요함. 가해자가 이런 단계의 책임도 인정하지 않거나/않으리라 예상된다면, 사실상 해당 가해자교육은 별로 성과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중단하는 것이 좋음.

〈표 1〉 공감의 초기 단계 모델¹⁾

1단계	타인의 정서 상태 인식
2단계	타인의 관점으로 사물을 볼 수 있음
3단계	정서적 또는 온정적(compassionate) 반응
4단계	타인의 고통을 개선하는 단계들을 밟음

〈표 2〉 공감의 확장 모델²⁾

1) Marshall, Hudson, Jones, Fernandez(1995), *Empathy in sex offenders*, Clinical Psychology, Review, 15, 99-113, 김덕일·송원영 역(2010), 『성범죄자 심리치료』, 결혼과 가족관계연구소, 55쪽, 재인용

2) Marshall(2002), Historical foundations and current conceptualizations of empathy, *In their shoes: Examining the issue of empathy and its place in the treatment of offenders*, Oklahoma city, OK: Wood 'N' Barnes Publishing, 김덕일·송원영 역(2010), 『성범죄자 심리치료』, 결혼과 가족관계연구소, 56쪽, 재인용

▣ 가해자교육 프로그램 소개

한국성폭력상담소의 가해자교육은 상담자와 가해자가 1:1 면접상담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매주 1회 2시간씩 총 8회기가 진행됨. 가해자교육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가해자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성폭력 통념 및 성인식 점검
- 피해자의 분노, 고통 등 사건이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을 가해자에게 전달.
- 피해자에 대한 공감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사과하도록 함

○ 한국성폭력상담소 가해자교육 프로그램 예시

회차	프로그램 내용	세부 내용	과제
1회	-오리엔테이션 -사건발생부터 현재까지 돌아보기	-교육자 및 교육단체에 대한 소개 -성폭력사건 발생부터 현재까지의 감정 나누기	
2회	-자기 소개하기 -교육목표설정	-자기소개서 작성을 통해 나를 돌아보기 (자기의 인생그래프 그리기)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서술하기 -교육동기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교육목표 설정	-자기소개서 / 교육목표 작성
3회	-성폭력 통념 되짚어보기 -성폭력 맥락적으로 이해하기	-성폭력에 대한 일반적 통념 되짚기 퀴즈 -구체적 상황 통해 성폭력사건 의미 판단하기 -성역할, 성규범, 성폭력에 관한 통념을 점검	-『남성들을 위한 성폭력근절 가이드북』
4회	-자신의 '성인식'과 현재 사건과 연결하여 성찰하기	-자신의 성역사(sexual history)에 대해 성역할, 성(폭력)에 대한 통념과 연결시켜 해석하기 -자신의 여성/남성과 친밀한 관계를 시작-유지- 종결했던 과정 쓰기	-자신의 성역사 쓰기
5회	-여성주의관점에서 성폭력 재해석 1	-여성주의 인식론과 반성폭력운동의 관계 고찰하기 -여성주의 시민권의 정치와 반성폭력운동의 관계 고찰하기	-『섹슈얼리티 강의 1, 2』 -『성폭력에 맞서다』

회차	프로그램 내용	세부 내용	과제
6회	-여성주의관점에서 성폭력 재해석 2	-성폭력에 관한 영상물 시청 (KBS 추적60분 <나는 성폭력피해자입니다>, 독립영화 <버라이어티 생존토크쇼> 등) -성폭력에 대한 기사 검색 및 비평 작성	- 영상물 감상문 작성 - 기사 비평 작성
7회	-피해자의 눈으로 사건 재해석	-피해자가 자신에게 시도했던 소통에 대해 반응 했던 패턴 정리하고 성찰하기 -피해자의 입장으로 감정이입해보고, 이를 바탕 으로 성폭력사건 재해석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 기술하기
8회	-사과문 및 교육 평가서 작성	- 위의 재해석을 통해 자신의 행동 재기술하기 (왜 그런 행동을 하였나?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스스로에게 어떤 약속을 할 것인가? 답변 작성하기) -교육평가 및 소감 나누기	-사과문 작성 -교육평가서 작성

■ 가해자교육의 원칙

1. 사전에 피해자를 면담할 수 있는 경우에만 교육한다.

성폭력가해자 교육에서 사전에 피해자를 면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성폭력가해자를 면담하기 이전에 피해자를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한 충분한 사전정보를 가지고 있어야만, 성폭력가해자의 잘못을 제대로 지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가해자가 성폭력가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칠 경우 상담자가 당황해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교육 전에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상호간에 충분히 협의해서 가해자교육의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훌륭한 교육이라도 상담자가 임의로 판단해서 피해자의 요구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이는 반쪽자리 교육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육을 시작하기에 앞서 피해자와 가해자, 교육의뢰기관 및 상담자(상담기관) 모두가 교육에 동의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에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2. 가해자교육비는 가해자 본인부담으로 납부한다.

대부분의 상담소에서 피해자상담은 무료로 진행하는 것과 달리, 가해자교육을 진행할 때에는 소정의 교육비를 부담하게 한다. 이는 온전히 피해자의 인권을 지원하기 위한 피해자상담과는 달리, 가해자교육의 경우 어느 정도는 가해자의 책임을 묻고 반성하는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가해자가 본인부담으로 교육비를 마련해오는 것은 스스로의 가해행위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행동이며, 교육비를 납부하는 과정 또한 가해자교육의 일부이다. 따라서 가해자교육의 경우 대학이나 노조 등 해당기관에서 교육비를 대신 납부해주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가해자 본인부담으로 납부하게 한다. 예외적으로 가해자가 교육비를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의뢰기관과 협의하여 해당기관에서 교육비를 납부할 수 있다.

3. 성실히 교육을 이수할 자발적 의사가 있는 가해자만 교육한다.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어느 정도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가해행위를 부인하며,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다. 따라서 가해자교육을 진행하는 상담자에게도 저항하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교육기간 내내 가해자와 상담자가 힘겨루기를 하거나 입씨름을 하다가 교육이 끝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가해자들은 일부러 교육시간에 지각하거나 결석하는 등의 행위로 성실하게 교육에 임하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러나 몇 회기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교육의 경우, 가해자가 살아온 인생관과 가치관, 신념체계를 송두리째 바꾸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다. 따라서 이 짧은 교육기간을 이런 방식으로 다 허비해버리는 것은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상 그다지 효과가 없다. 이는 가해자를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한 채, 가해자에게 교육기간을 다 이수했다는 일종의 면죄부만 부여하는 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가해자가 반복적으로 지각·결석을 하고 교육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거나, 가해자의 저항이 너무 심해서 교육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해자교육을 진행하지 않는다.

4. 한 사건에서 피해자 상담과 가해자 교육을 동일한 상담자가 진행하지 않는다.

가해자를 교육한다고 해도 상담자는 가해자의 말을 충분히 경청하고 공감해주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교육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상호 간의 충분한 신뢰와 존중이 필요하며, 교육자와 가해자의 상호소통과 공감 등의 역동적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를 상담한 상담원의 경우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의 말에 공감하기가 힘든 경우도 있다. 이때 가해자는 상담자가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편만 들고 있다는 불신이 생기게 되며, 이 경우 가해자와의 상호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가해자교육이 실패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 상담을 한 상담원이 사건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해서 동시에 가해자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담원이 가해자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5. 사건 조사 및 처리에 관여한 상담자가 가해자교육을 담당하지 않는다.

대학, 직장, 시민단체 등 성폭력 사건 처리에 대한 내부규정이 있을 경우, 내부 상담자나 성폭력사건담당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과정에 개입하게 된다. 이때 내부 상담자의 경우 위원이나 간사 등으로 조사위원회, 대책위원회에 참여하거나, 혹은 성폭력 사건 담당자로서 상벌위원회나 징계위원회에 참여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와는 조사자나 징계위원으로서 만나게 되기 때문에, 가해자로서는 해당 상담원에 대해서 거리감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심지어는 적대감이나 반감을 가지기도 한다. 이 경우 사건처리가 종결되었다고 하여도 해당 상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는 좀처럼 편안해지기 힘들뿐만 아니라, 가해자로서도 가해자교육과정 자체가 조사나 징계의 연속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가해자교육의 경우 조사나 징계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상담자가 진행하는 것이 좋다.

6. 법적 고소가 진행 중인 사건의 가해자교육은 진행하지 않는다.

가해자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해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신의 가해행위에서 거리두기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자신의 가해행위를 가해자의 입장이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재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적 고소나 국가인권위 진정 등으로 다투고 있을 때에는 가해자가 이러한 거리두기를 하기가 쉽지 않다. 심지어 어떤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형사소송이 진행 중일 때, 피해자와 아무런 협의 없이 재판에서 형을 감형받기 위한 수단으로 가해자교육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 진행되는 가해자교육에서는 진정한 가해자의 반성과 변화를 이끌어내기가 힘들다. 따라서 법적 고소나 국가인권위·노동부 진정 등으로 제도적 판단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가해자교육을 진행하지 않으며, 법적 판단이 종결한 이후에 가해자교육을 진행한다.

7. 2차 가해자 교육을 할 때는, 해당 2차 가해자뿐만 아니라 공동체 교육을 같이 진행한다.

최근에는 2차피해/2차가해의 개념이 일반화되면서 직접적인 성폭력 가해행위를 저지른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가해자를 두둔한 2차 가해자가 제소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일반적으로 2차가해는 1차가해보다는 더욱 판단하기가 힘들며, 보다 경계지점에 서있는 경우가 많다. 2차가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특정한 2차가해행위만 문제된다기보다는 해당구성원 전체가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낮거나, 2차가해가 발생할 수 있도록 명시적/암묵적으로 동조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2차가해의 경우에는 1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동시에 신고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2차가해자에 대한 교육이 의뢰된 경우에는 해당 2차가해자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해당공동체 전체가 반성폭력교육을 받도록 권유한다.

■ 성폭력가해자 교육프로그램 작성 연습

사례 1

학과 주점에서 모두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가해자가 A와 피해자B가 있는 테이블로 옴. 가해자가 술에 취해서 A의 얼굴과 가슴을 만졌으며 A도 가해자의 얼굴을 같이 만짐. 가해자가 피해자B의 얼굴과 가슴을 만졌는데, 피해자B가 이를 제지하였으나 가해자가 같은 행동을 반복함. 피해자B가 이 사건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학과의 남자선배들이 가해자를 두둔하고 나서면서 그 자리에서 실랑이가 벌어짐. 피해자B는 가해자를 신고하고, 다른 남자선배들에 대해서는 2차 가해자로 신고함. A는 그 사건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신고하지 않았음. 가해자는 그 사건에 대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함.

(1) 이 사건지원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상황은 무엇인가?

(2) 가해자의 상황에 따른 지원계획을 세워보자

○ 가해자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에 따른 지원계획을 세워보자

○ 가해자의 주변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무엇인가?

○ 가해자교육을 진행한다면, 위 프로그램 예시를 참고하여 8회기 프로그램을 작성해보자.
(예시로 제시한 프로그램 이외에 이 사건의 가해자에게 특별히 더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회차	프로그램 내용	세부내용	과제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 성폭력가해자 교육프로그램 작성 연습

사례 2

피해자(여성 27세, 비혼)는 최근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한 새내기 활동가이다. 부장인 가해자(남성 35세, 비혼)는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매우 잘해주었으며 피해자에게 호감을 보였다. 업무도 잘 가르쳐주었고 술자리에서도 잘 챙겨주며 술을 마시면 대부분 집까지 배려해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피해자의 집 앞에서 가해자가 평소 좋아하고 있다고 고백하였다. 피해자는 나이차가 크게 났던 가해자에게 직장동료 이상의 감정이 전혀 없었기에 호의를 거절했다. 그러던 중 가해자는 피해자를 벽에 몰아세워 키스를 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밀치고 도망쳤고, 다음날부터 가해자를 보는 것이 힘들어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평소 성실하던 피해자가 갑자기 출근하지 않은 점이 이상하여 동료는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알고 상담자에게 신고하였다. 가해자는 자신과 피해자는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는데 피해자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성폭력 사실을 부인하였다. 노조 내의 대부분의 활동가들이 두 사람이 사귀는 줄 알았으며, 잘됐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인다.

(1) 이 사건지원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상황은 무엇인가?

(2) 가해자의 상황에 따른 지원계획을 세워보자

○ 가해자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에 따른 지원계획을 세워보자

○ 가해자의 주변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무엇인가?

○ 가해자교육을 진행한다면, 위 프로그램 예시를 참고하여 8회기 프로그램을 작성해보자.
(예시로 제시한 프로그램 이외에 이 사건의 가해자에게 특별히 더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회차	프로그램 내용	세부내용	과제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발행일	2011년 10월
발행인	이윤상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주 소	서울 마포구 합정동 366-24 2층
문 의	02-338-2890~2
편 집	(주)인디엔피 (02-741-3381)
후 원	한국여성재단
